

# 2021 제2차 고등교육 정책포럼


- 국가균형발전과 고등교육의 방향 -

| 일 시 | 2021. **11. 22.** (월) 15:00~18:20

| 장 소 |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 컨벤션홀  
(Bloom A / LL층)

| 진행방법 | 온·오프라인 실시간 생중계

## 행사 개요

- 행 사 명** 제2차 고등교육 정책포럼
- 목 적** 4차산업혁명, 국내 인구감소, 코로나19로부터 시작된 교육환경의 도전적인 변화에 대응하고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학의 공공성과 책무성 등 국립대학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고등교육 방향 모색
- 일 시** 2021. 11. 22.(월) 15:00~18:20
- 장 소**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 컨벤션홀 (Bloom A / LL층)
- 주 제** 국가균형발전과 고등교육의 방향
- 진행방법** 온·오프라인 실시간 생중계 (Youtube) 
- 참여방법** 충남대학교 유튜브 생중계 시청
- 주최/주관** 주최 :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 / 국회 교육위원회  
 주관 : 충남대학교

## 주요 일정

시 간	내 용	발표자
15:00~15:10	개회선언 및 내빈소개	사회자 : 충남대학교 이영석 기획처장
15:10~15:30	개 회 사	제주대학교 송석언 총장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장]
	환 영 사	충남대학교 이진숙 총장[주관대학]
	축 사	조해진 국회 교육위원장, 윤영덕 국회의원 [교육위원회]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김인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15:30~16:30	발 표	<b>발제자</b> 1   마강래 교수[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2   반상진 교수[전북대 교육학과] <b>발표 주제</b> 1   수도권 쏠림 현상이 부르는 국가적 위기 2   국립대학 대전환의 방향과 중점과제
16:30~16:50	휴 식	
16:50~17:35	종합토론	<b>좌장:</b> 전남대학교 정성택 총장 <b>패널:</b> 경북대학교 홍원화 총장, 전북대학교 김동원 총장 충북대학교 김수갑 총장, 윤영덕 국회의원 교육부 신익현 고등교육정책관 동아일보 이종승 부국장
17:35~18:20	질의응답	
폐 회		

◆ 01	<b>개회사</b> 제주대학교 송석연 총장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장]
	1

◆ 02	<b>환영사</b> 충남대학교 이진숙 총장 [주관대학]
	3

◆ 03	<b>축사</b>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해진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윤영덕 국회의원 [교육위원회]
	6

<b>수도권 쏠림 현상이 부르는 국가적 위기</b> 마강래 교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

04 ◆

12

<b>국립대학 대전환의 방향과 중점과제</b> 반상진 교수 [전북대학교 교육학과]
--------------------------------------------------

05 ◆

34

<b>종합토론</b>
-------------

06 ◆

62



안녕하십니까?

국가거점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장 송석언입니다.

오늘 국가거점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 주관으로 『국가균형발전과 고등교육 방향』이라는 주제로 2021년도 제2차 고등교육 정책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요즘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국가거점 국립대학교와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해 포럼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일정에도 포럼 개최에 대한 축하와 함께 많은 힘을 실어주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님, 국회 교육위원회 조해진 위원장님과 윤영덕 의원님,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님과 김인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열정을 가지고 포럼의 발제를 맡아주신 중앙대학교 마강래 교수님과 전북대학교 반상진 교수님, 토론을 맡아주신 국회 윤영덕 의원님과 총장님들, 교육부 신익현 고등교육정책관님과 동아일보 이종승 기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0년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학령인구는 21.9%(1,012만명→790만명)로 대폭 감소하였고, 이러한 학령인구 감소 추이는 앞으로 계속될 전망이다. 또한 수도권 쏠림현상과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으로 2021학년도 전체 대학의 신입생 총원율은 91.4%이지만 이중 비수도권 미충원율 비중이 75%를 차지하는 등 지방대학의 정원미달이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4차 산업혁명시대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학 구조 전반에 대한 개혁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역의 고른 성장을 기반으로 각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살린 고등교육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 인재를 육성하는 체계 구축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시작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오늘 포럼에서는 “수도권 쏠림 현상이 부르는 국가적 위기”와 “국립대학 대전환의 방향과 중점과제”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 질의응답의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부와 국회, 언론사 및 대학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하면서 국립대학이 당면한 위기를 직시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학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고등교육 방향에 대해 공론화하고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유의미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번 포럼의 주관을 맡아주신 이진숙 충남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제주대학교 총장 **송석언**



어느덧 2021년도 11월을 맞아 한해를 되돌아보고 새해의 계획을 세워나가는 가운데,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와 국회 교육위원회가 공동으로 '2021년 제2차 고등교육 정책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공사로 바쁘신 가운데 고등교육 정책 포럼을 빛내주신 국회교육위원회 조해진 위원장님과 운영덕 국회의원님,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님, 교육부 신익현 고등교육정책관님, 제주대 송석언 총장님을 비롯한 국가거점국립대학 총장님, 김인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오늘의 포럼에 함께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는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혁신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교육을 비롯한 고등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과 경쟁 중심의 교육을 넘어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고 미래 가치창출을 위한 혁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0개의 국가거점국립대학은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핵심으로서 교육 혁신뿐만 아니라, 현재 당면한 대학의 위기를 타개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면서 지역균형발전과 산업 혁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씩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가균형발전과 고등교육의 방향’을 주제로 진행되는 제2차 고등교육 정책포럼은 지난 1차 포럼에 이어 국가거점국립대학이 고등교육의 질적 성장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교육혁신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포럼을 통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께서 들려주시는 귀중한 말씀은 고등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은 물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거점국립대학, 대한민국 교육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동시에, 다양한 변화를 요구받는 시대적 환경 속에서 미래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포럼을 준비한 충남대는 9개 국가거점국립대학교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소통해, 미래 교육의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중에도 오늘의 정책 포럼에 함께해주신 국회교육위원회 조해진 위원장님과 윤영덕 국회의원님,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님을 비롯한 귀빈 여러분과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님, 여러분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포럼이 대한민국 미래 교육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충남대학교 총장 **이진숙**







제2차 고등교육정책 포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우리 고등교육계는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대유행과 최근 그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는 학령인구의 급감,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 등 안팎으로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환경의 도전적 변화에 대응하고 대학의 미래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고등교육정책포럼이 개최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대학들은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한 특성화,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을 통한 역할 강화, 대학 간 공유와 협력을 통한 혁신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 노력을 지원하고자 대학혁신지원사업의 확대, ‘지역혁신플랫폼’ 및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과 같은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사운영 및 정원과 관련한 각종 규제도 완화하여 대학의 질적 혁신과 체질 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대학과 정부가 함께 소통하면서 협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정부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에서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11월 22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안녕하십니까,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조해진 의원입니다.

“국가균형발전과 고등교육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2021년도 제2차 고등교육정책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충남대학교 이진숙 총장님과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장 송석언 제주대 총장님, 그리고 본 행사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고등교육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인재의 수도권 쏠림 현상에 따른 지역 간 교육격차 심화,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재정정책의 문제점 등으로 지방대학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방대학의 경쟁력 저하는 지역경제의 쇠퇴와 지역공동화, 더 나아가 지방의 소멸이라는 악순환 구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대학살리기가 국가의 중점적 정책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지역거점대학을 중심으로 대학 간 자원을 공유하는 공유협력체제로 전환하여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해당 지역과 거점대학 간에 상생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산학협력을 포함하여 지역과 대학간 공조체제를 확립하고, 대학과 지방정부 간에 지역혁신을 위한 공동플랫폼도 구축해야 합니다.

열악한 대학재정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이나 고등교육세 신설, 국립대학법 제정 등 다양한 대안을 놓고 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도입된 지역인재채용할당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단순반복업무만 아니라 연구지원, 행정지원 등의 업무 등에도 지역고급인력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제2차 고등교육정책포럼에서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고등교육이 논의되는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제기되는 여러 정책들을 토대로 국회도 지방 국립대 지원방안과 유기적인 산학협력 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논의를 통해 국가거점국립대학교가 국가균형발전과 고등교육 혁신의 중추로서 더욱 진일보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조 해 진**



대단히 반갑습니다. 광주 동구남구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영덕입니다.

고등교육이 위기입니다. 위기는 특히 지방대학에 집중됩니다. 지방대학의 위기는 곧 지역의 위기로 이어집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많은 대학이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 전체 대학에서 신입생 미충원 규모가 4만 명 이상 발생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학령인구가 갈수록 줄어들 것이고 그 충격은 지역에 더 깊게 다가올 것이라는 점입니다.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가 고등교육 위기를 진단하고 방향을 모색하고자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2021 제2차 고등교육 정책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8월, 1차 포럼에서는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도전과 미래’를 주제로 심도깊은 토론이 이루어졌는데, 오늘 2차에서는 ‘국가균형발전과 고등교육의 방향’을 주제로 포럼이 진행됩니다.

뜻깊은 포럼을 준비하기까지 애쓰신 충남대학교 관계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발제를 준비해주신 중앙대학교 마강래 교수님과 전북대학교 반상진 교수님, 좌장을 맡으신 전남대학교 정성택 총장님을 비롯해 패널로 자리해주신 경북대학교 홍원화 총장님, 전북대학교 김동원 총장님, 충북대학교 김수갑 총장님, 교육부 신익현 고등교육정책관님, 동아일보 이종승 부국장님 감사합니다. 고등교육에 깊은 관심을 갖고 온·오프라인으로 포럼에 함께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최근 고등교육 위기에 대한 논의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여러 차례 간담회와 토론회를 개최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왔습니다. 특히, 지방대학의 위기는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역에서 느끼는 위기감은 더 큼니다. 지역혁신의 마중물을 만들고자 2020년에 출범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은 지역혁신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입니다. 지역대학이 지역혁신의 주체가 되어서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겁니다. 당시 비수도권 모든 시·도에서 참여의사를 보일 정도로 지역의 참여의지가 높았습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이기도 할 겁니다. 결국 어느 한 단위의 노력이 아닌 정부와 지자체, 기업과 대학이 연대해야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국정감사 때 본 의원실에서 3개 플랫폼에 지역혁신플랫폼 사업에 대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지역혁신플랫폼 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본인의 기관에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응답자의 90% 이상입니다. ‘다른 지역에도 지역혁신플랫폼 사업 수행이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80% 이상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국정감사 기간에 각 대학 총장님들께서 지역혁신플랫폼 사업은 전국으로 확대해달라는 간곡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대학-지자체-기업이 원팀이 되어 지역혁신을 일으키는 주체가 되고자 하는 겁니다.

지역혁신플랫폼을 포함해 고등교육 위기 극복,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의 복합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 고등교육은 어디에 서 있나. 위기는 어느 정도인가. 수도권과 지방대학의 차이는 어떠한가. 그 차이가 지역균형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면밀하고 정확한 진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지점을 알아야 고등교육의 대전환 방향을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열리는 포럼은 무척 뜻깊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고등교육의 미래와 희망, 대학과 지역의 상생을 논의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 역시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영덕**



# 04

## 수도권 쏠림 현상이 부르는 국가적 위기

마강래 교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 「수도권 쏠림 현상이 부르는 국가적 위기」



마강래 (중앙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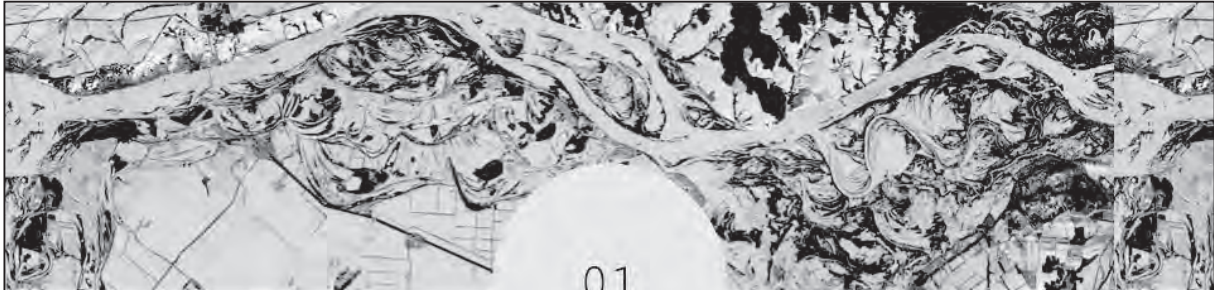
### 목차

01. 무엇이 지역의 위기를 촉발하고 있는가
02. 지역간 격차의 심화
03. 비수도권에도 힘을 모을 공간이 필요하다
04. 에너지가 폭발하는 거점의 조건
05. 논의를 정리하며

# 04

## 수도권 쏠림 현상이 부르는 국가적 위기

2021 제2차  
고등교육 정책포럼



01

### 【무엇이 지역의 위기를 촉발하고 있는가】

제1장. 무엇이 지역의 위기를 촉발하고 있는가

4

향후 20년 간의 우리나라를 휩쓸 메가트렌드 → 새로운 공간계획의 필요성

산업구조의 변화



인구구조/공간구조의 변화



제1장. 무엇이 지역의 위기를 촉발하고 있는가 5

### 선진국도 2010년 이후 산업구조가 급속하게 변화

1910년대-	1960년대-	2010년 이후
<b>산업기반</b> 자동차와 화학 기반산업	<b>산업기반</b> 반도체, 정보통신, 컴퓨터, 자동차, 항공기반	<b>산업기반</b> 자율주행차, 로봇, 웨어러블기기, 드론, 바이오, 드론 등
<b>생산-사회 시스템</b> 석유와 전기 에너지 기반 대량 생산체제 현대도시 창출	<b>생산-사회 시스템</b> 유연적 생산 및 적기생산 (lean manufacturing) 대규모 맞춤형 생산 가능 세계화 창출	<b>생산-사회 시스템</b> 혁신의 속도에 따른 제품주기의 단축 파괴적 혁신이 소프트웨어부문에 발상 승자독식 시장 확대 스타트업이 신산업의 중심으로 부상

제1장. 무엇이 지역의 위기를 촉발하고 있는가 6

### 산업입지 7대 메가트렌드

1. 수도권광역에서의 첨단산업 발전
2. 지방산업단지수요감소
3. 도심고밀화
4. 생활권역의 광역화
5. 공유경제의도래
6. 직주 근접

자료출처: 최, 2019,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성장기업을 위한 입지정책방안, 국토정책 Brief No. 722

제1장. 무엇이 지역의 위기를 촉발하고 있는가 7

### 강남과 판교로 몰리는 첨단 기업들

- 국내 굴지의 첨단기업들이 판교로 이동 중
- 판교는 강남의 문화, 상업, 교육 인프라를 이용하기 좋은 지역

제1장. 무엇이 지역의 위기를 촉발하고 있는가 8

### 스타트업 기업들도 서울과 서울의 도심을 중심으로 발달

큰 투자금을 받은 스타트업의 지역 비율(2019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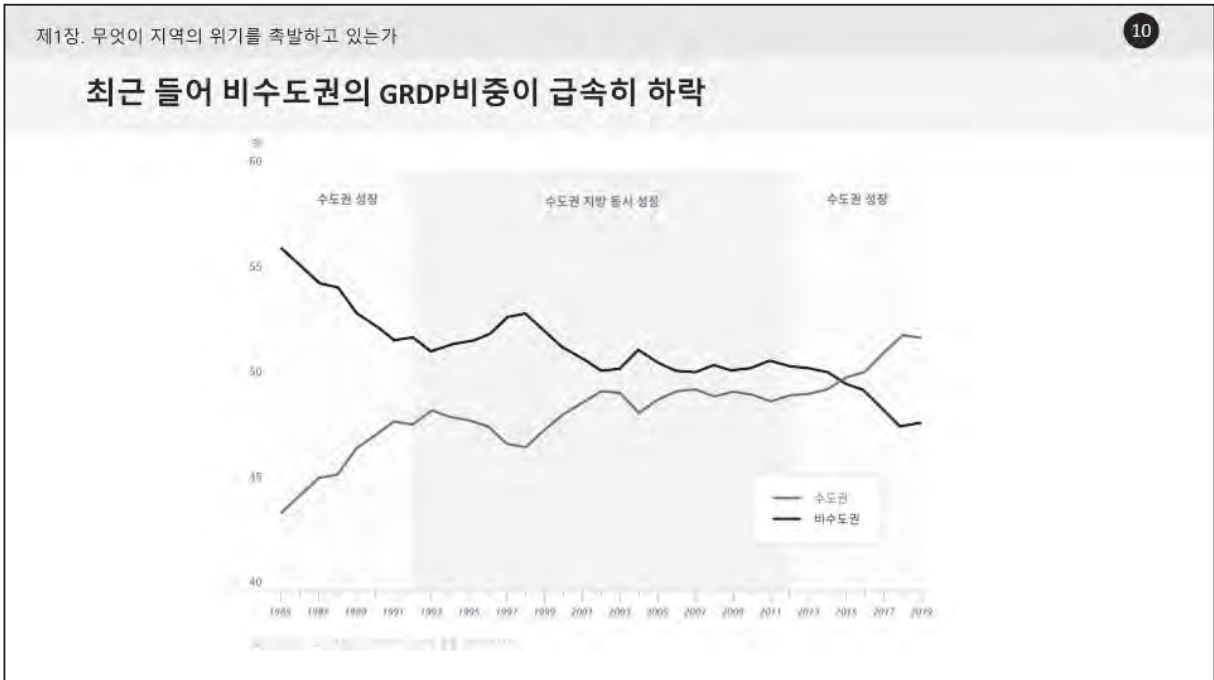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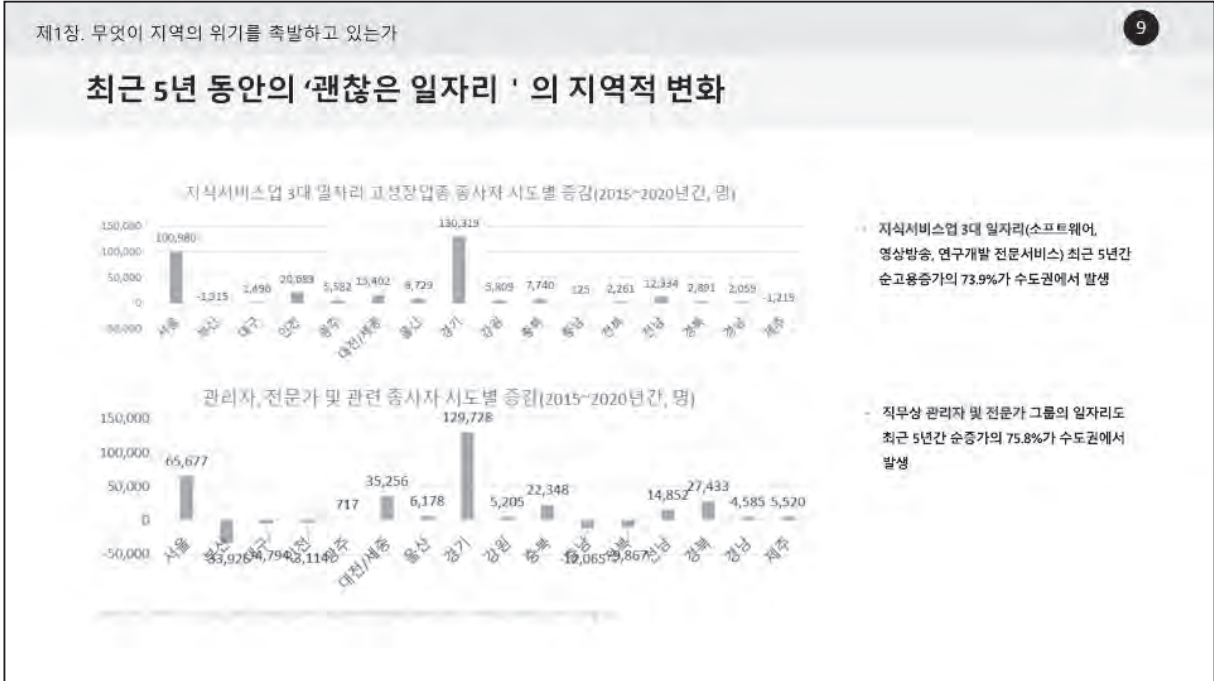
100억원 이상 투자받은 스타트업 지역 비율

100억원 이상 투자받은 스타트업의 지역 비율

서울의 지역구별 스타트업 수(2019 기준)

서울의 지역구별 스타트업 수 (100억원 이상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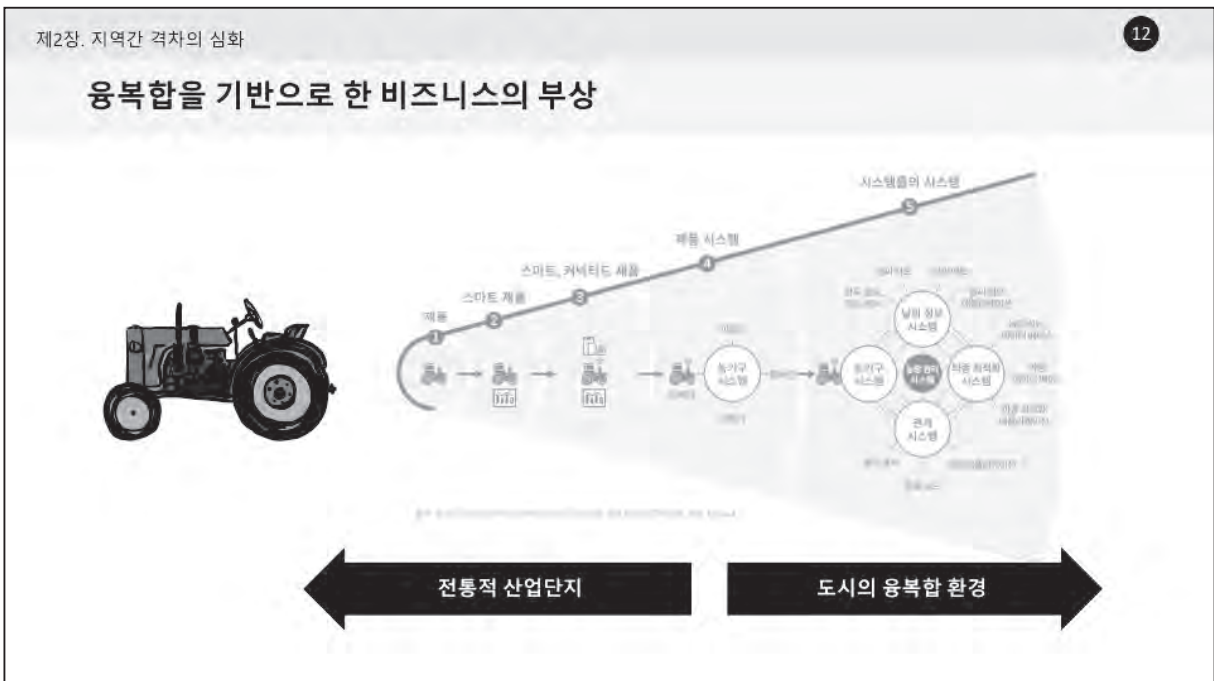
서울의 지역구별 스타트업 수 (1000만원 미만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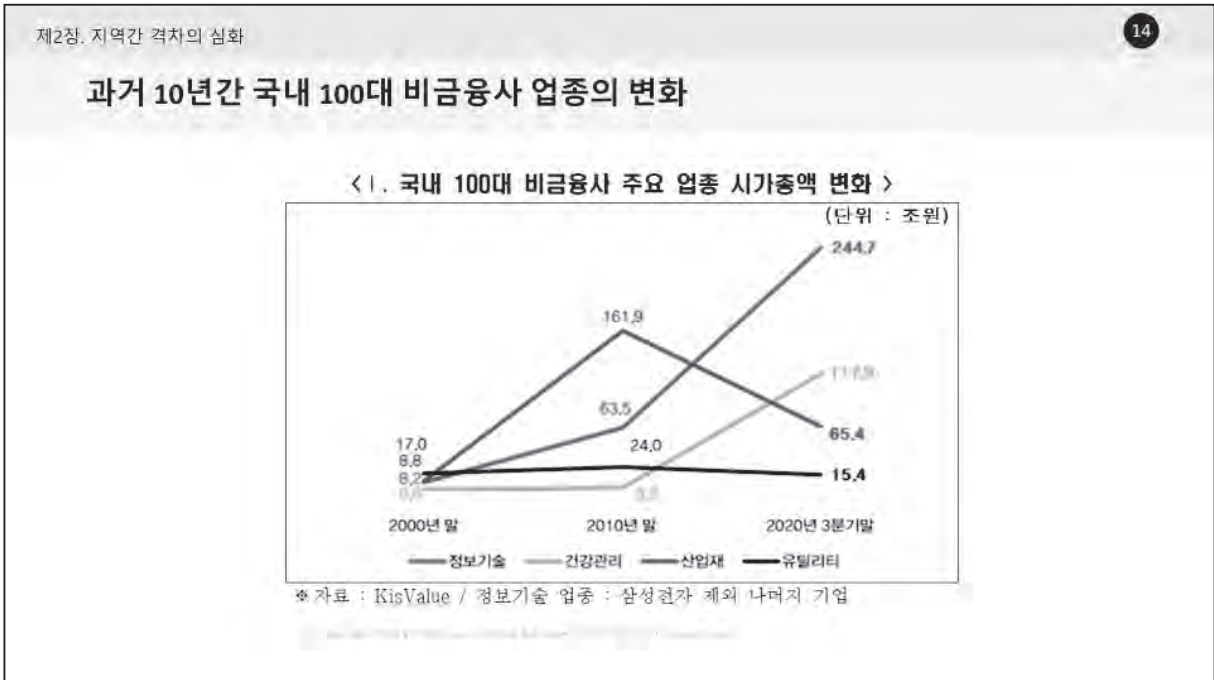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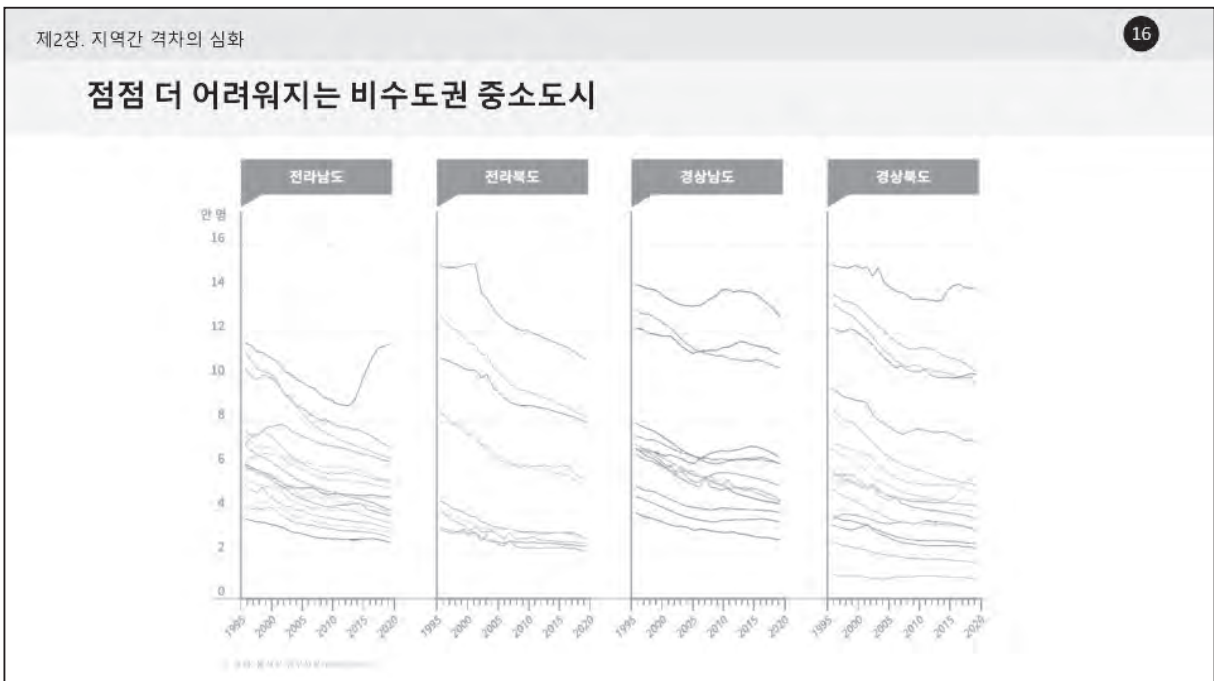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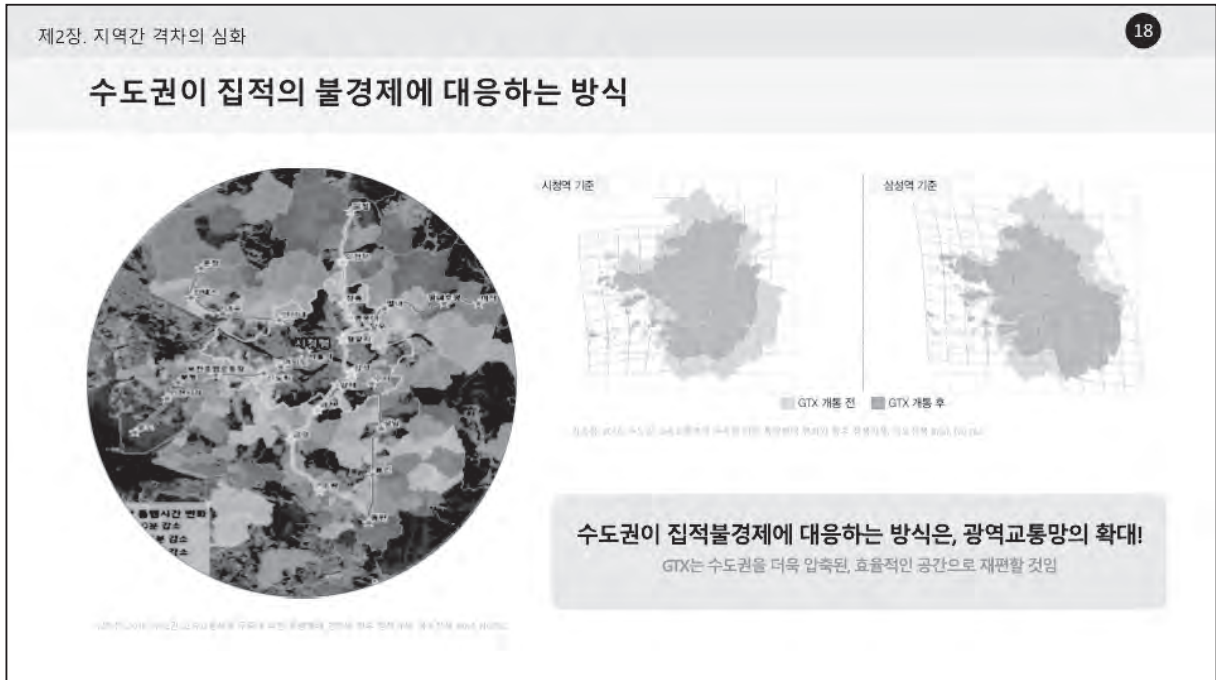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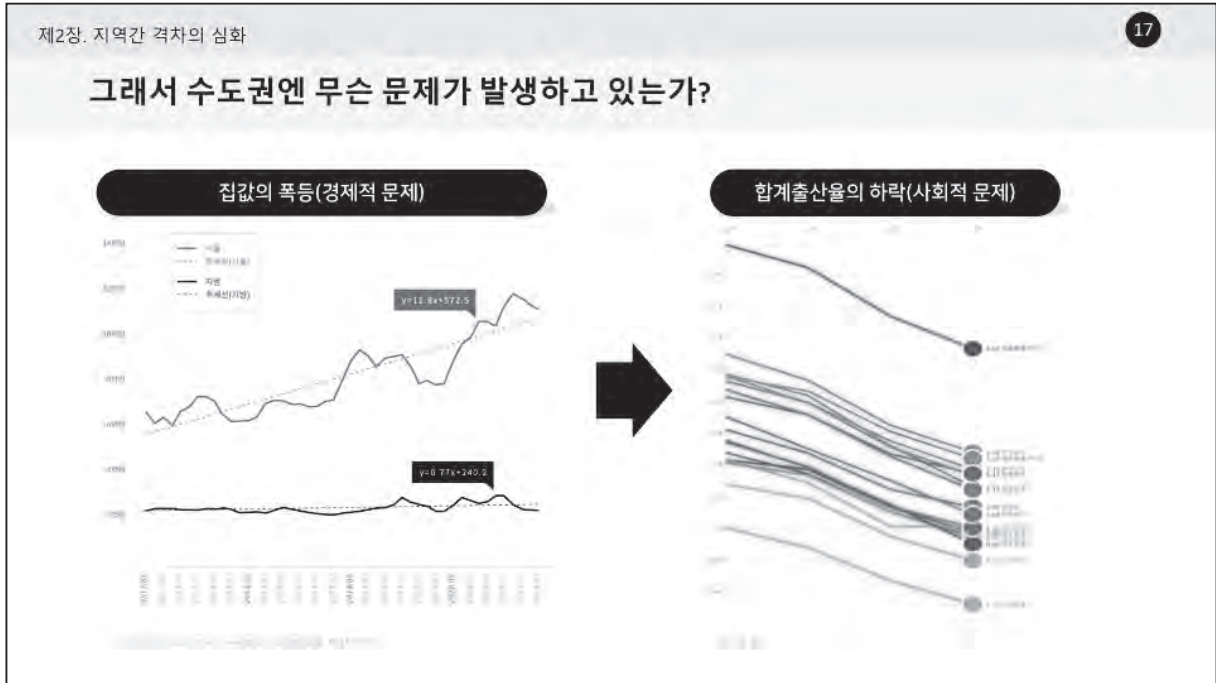
### 【 지역간 격차의 심화】











# 04

## 수도권 쏠림 현상이 부르는 국가적 위기

제2장. 지역간 격차의 심화 19

### 그래서 중소도시엔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가?

임계인구와 소멸확률

인구 3만명 이하 지역

2000년	2020년
용진군, 화천군, 양구군, 무주군, 영양군, 울릉군 (6개 지역)	용진군,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강원), 단양군, 순창군, 임실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구례군, 곡성군, 영양군, 철송군, 군위군, 울릉군, 의령군 (18개 지역)

\* 통계청 전국 인구는 470만명 증가, 수도권은 400만명 증가

제2장. 지역간 격차의 심화 20

### 그래서 중소도시엔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가?

**상위 위계의 생활인프라의 이탈**

**주민 1인당 행정비용의 증가**



03

### 【 비수도권에도 힘을 모을 공간이 필요하다】

제3장. 비수도권에도 힘을 모을 공간이 필요하다

22

#### 젊은 산업인력의 특징과 입지선택

조성철 외(2019)에서는 젊은 산업인력의 공간선호 특징을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

- (문화적 트렌드: 로컬지향성) 청년세대는 획일화된 공간을 지양하고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을 선호
- (사회적 트렌드: 느슨한 연대) 청년세대는 학습을 위한 느슨한 커뮤니티에 쉽게 접속할 수 있는 공간을 선호
- (경제적 트렌드: 자유로운 노동) 청년세대는 자유노동-공유경제 패러다임을 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선호



가능한 다양한 문화적 기회를 접할 수 있는가?  
가능한 부담 없이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가?  
수평적 조직 속에서 자유로운 노동이 가능한가?

제3장. 비수도권에도 힘을 모을 공간이 필요하다 23

### 젊은 산업인력의 특징과 입지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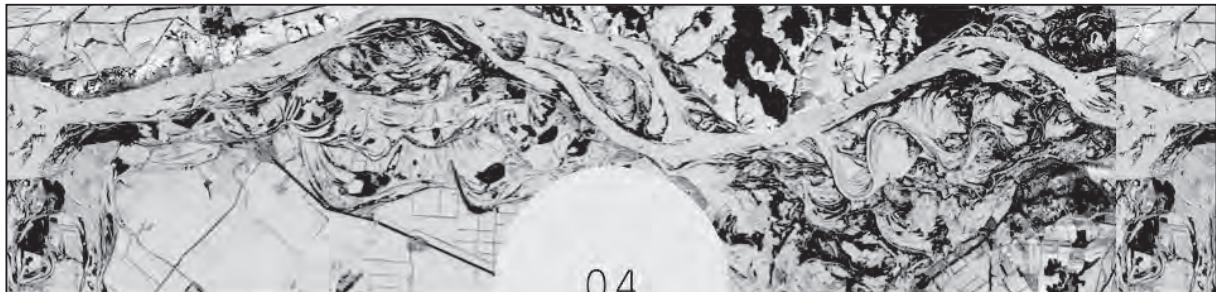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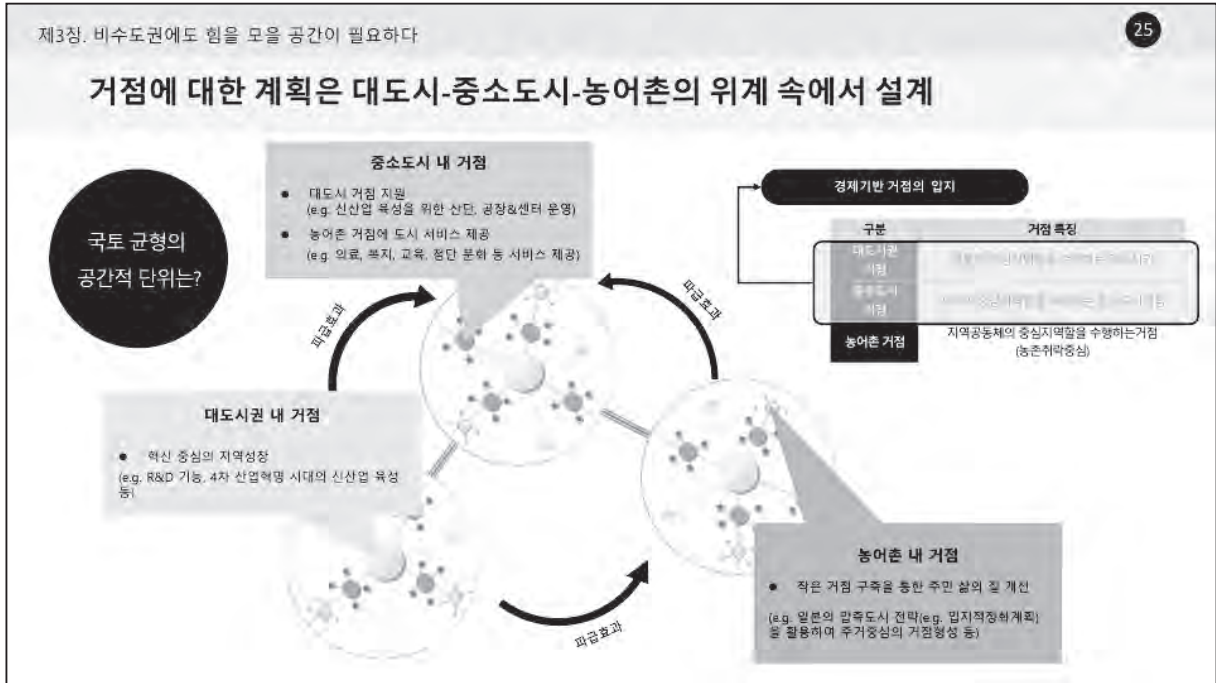
**Regional Studies**  
The creative class: do jobs follow people or do people follow jobs?  
ABSTRACT

제3장. 비수도권에도 힘을 모을 공간이 필요하다 24

### 고임금 직장은 일자리가 사람을 따라가는 현상을 보임

다러진 노동 인력들 ↔ 다러진 산업구조

이에 부응하는 공간 체계를 구축해야!!



### 【 에너지가 폭발하는 거점의 조건】



제4장. 에너지가 폭발하는 거점의 조건 29

### 일-삶-놀이-배움이 융복합된 공간구축의 예

세계적인 혁신 거점들은 저마다 내세우는 특화 산업과 혁신 전략이 상이하지만, 이들의 공간적 특성은 **산업기능뿐만 아니라 주거, 여가·문화, 교육 등 다양한 기능이 한 곳에 어우러져 있다는 특징**

↓

대도시 거점의 경우는 압축적 공간 (예를 들어 약 2km<sup>2</sup>의 면적)에 W-P-L-L을 모두 융합

<싱가포르 One-North>

one-north

work	live
play	learn

- 싱가포르 원노스(약 2km<sup>2</sup>)는 크게 바이오폴리스, 퓨저노폴리스, 비스타 익스체인지 등 8개 구역으로 구분됨
- 바이오폴리스(Biopolis)는 최첨단 BT연구단지로서, 약 18만 5천m<sup>2</sup>의 부지에 바이오기술을 위한 공공연구소, 민간 바이오기업, 병원 및 서비스기업들이 연계하여 연구공동체를 구축
- 미디어허브인 퓨저노폴리스(Fusionopolis)는 바이오폴리스 북쪽에 두 개의 초고층 빌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보기술과 전자공학 연구 관련 기관 및 기업이 입주
- 문화교류 중심지인 비스타 익스체인지는 원노스의 업무와 기업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고층 오피스와 호텔, 워케이션, 컨벤션, 주거단지 등 복합된 도시기능이 집적화됨

제4장. 에너지가 폭발하는 거점의 조건 30

### 일-삶-놀이-배움이 융복합된 공간구축의 예

**쉐어존 (미팅룸 외)**

업무에 필요한 이벤트, 미팅, 서비스, 사무 공간 등

**크리에이트존**

업무 스타트업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칠존 (일반인오피스)**

휴식, 식사 공간 / 일반인도 이용가능 (24시간 오픈)

- 프랑스의 Station-F(면적 3만4천m<sup>2</sup>)의 경우에는 단순 '공동일터'에 머무르지 않고 휴식·여가 활동공간 제공을 통해 '공동삶터'로 조성하였음
- 이를 위해 공유(Share), 창조(Careats), 휴식(Chill) 3개 구역으로 공간을 구성하고, 공간내 밀집효과를 극대화한 시설계획을 통해 창업자와 지원기관, 지역을 긴밀하게 연결하였음

제4장. 에너지가 폭발하는 거점의 조건 31

### 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범위를 확대해야

- 거점 내 기업의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의 범위를 확대해야 함
- 실제 기업이 이전 또는 신규투자를 결정하기 위해 고려하는 5가지 기본 요건은,
  - ①확실한 입지,
  - ②클러스터 가능성,
  - ③공공지원,
  - ④라이프스타일 Support,
  - ⑤향후 투자가치임

확실한 입지: 산업생태계와의 연계성, 기존 중심지와와의 접근성 (ex. 강남 정근성)

클러스터 가능성: 입주기업 이미지, 위상을 높이는 차별화된 정체성 (ex. 혁신기업 이미지), 다양한 산업클러스터로 기업간 교육, 원활한 교류인력 이동 시너지

공공지원 (정책, 투자 등): 광공 정책, 유공공명카 (ex. 식의차, 협회, 대학, 병원 이전 등), 민병티브(보조금, 세제) 주거 등 특별지원

라이프스타일 Support: 풍부한 교육, 소양, 문화, 엔터테인먼트 자원사업, 특주 근접

향후투자가치 (각종 배입가에서 시작): 자판스라운 미래 투자가치 높임 (저렴한 토지가 포함)

제4장. 에너지가 폭발하는 거점의 조건 32

### 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범위를 확대해야

기본가치

- 입지
- 교통접근성
- 주변인구
- 토지가
- .....

“현 단계에서 민간기업은 입지를 통한 기본가치로 판단”

확실한 입지

향후 투자가치

라이프 스타일 support

공공지원

클러스터 가능성

생태계 관점에서 업그레이드 가능한 요소

[기업유치매력도]

라이프스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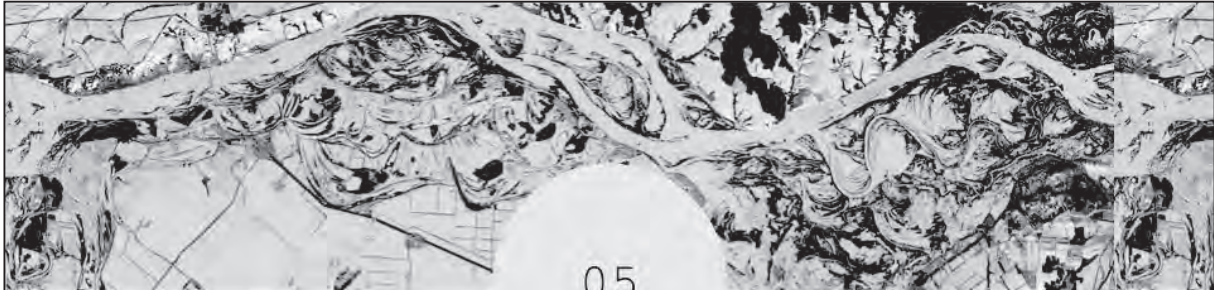
공공지원

클러스터가능성

입지를 통한 기본가치만인

- 입지 및 향후 투자가치에 대한 기본가치는 사업추진 전·후에 크게 변하지 않는 평가요소
- ①산업 클러스터, ②종사자들의 라이프스타일 support, ③공공부문의 지원 등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요소임





05

### 【 논의를 정리하며 】

제5장. 논의를 정리하며 34

### 최근 급진전되고 있는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 논의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 계획**

충청권	전 지역 50분 생활권, 국내외 기업 유치 2천개, 신규일자리 24만개
대구·경북	실질 GDP 300조, 벤처중소기업 5천개, 외국인 관광객 8백만명
광주·전남	실질 GDP 200조, 기업유치 2천개, 일자리·인력양성 20만명
부산·울산·경남	전 지역 1시간 생활권, 실질 GDP 401조, 외국인 관광객 1천만명

**거점 간 통행시간 변화**

대전·세종·충청	1시간 30분 → 43분
대구·경북	1시간 58분 → 29분
광주·전남	1시간 21분 → 33분
부산·울산·경남	2시간 15분 → 37분

\*GDP: 지역내총생산  
자료: 국토교통부, 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20211014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loney.kr/LeNT

제5장. 논의를 정리하며 35

### 초광역권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될 예정

**메가시티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초광역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국토기본법」에 초광역권의 정의, 초광역권 발전계획 및 초광역권 계획 수립, 협력사업 추진 근거 등을 신설
- 지역 주도로 수립한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의 계획을 상호 연계할 예정

**초광역권계획**

최근(2021.06.16)에 국토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었음

- 도종합계획을 "초광역계획, 도종합계획"으로 하고, 초광역권계획에 대한 정의를 삽입
- 둘 이상의 시도지사가 초광역권의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

제5장. 논의를 정리하며 36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특별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 등 협력단계별 차등 지원을 통해, 신속한 성공모델 창출 및 확산을 유도**

-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특별지자체를 구성하여 견고한 협력체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설치 및 운영을 적극 지원**
- 특별지자체 설립 준비에 필요한 소요재원과 시범사업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하고, 출범 준비를 위한 기구 및 인력도 보장

특별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분권협약을 통해 적극 위임**하며, 특별지자체와 통합지자체 대상으로 **'초광역특별협약'**을 도입

→ 종합적인 사업패키지 및 재정, 사업, 규제, 세제 등 지원특례를 맞춤형으로 설계하여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

제5장. 논의를 정리하며 37

### 정리하며

1. 비수도권의 위기는 산업구조 변화와 긴밀한 연관성이 있음
2. 비수도권 대학의 위기 또한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사회적 인구이동'과 관련  
→ 우리나라의 인구감소 트렌드와 상관이 없음
3. 최근 비수도권에서도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한 거점 강화 전략을 쏟아내고 있음  
→ 이 또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간전략적 성격이 강함
4. 비수도권 거점 대학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함

제5장. 논의를 정리하며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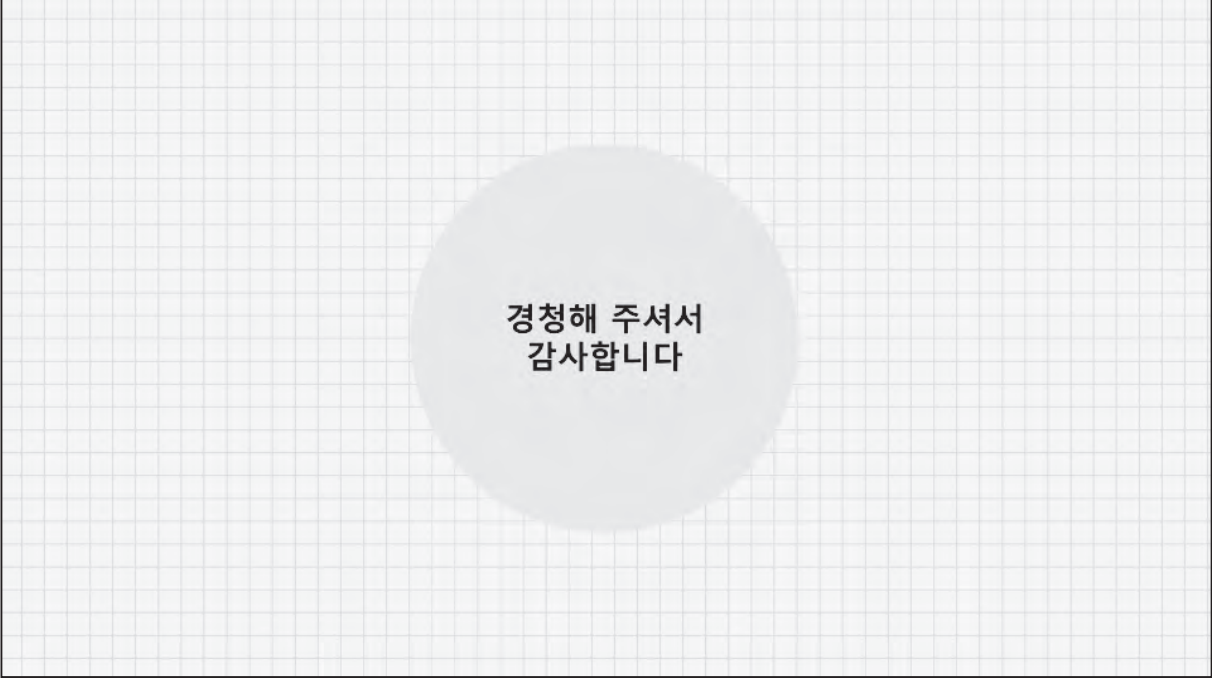
### 정리하며

- 정부의 교통인프라 정책, 산업정책, 인재양성 정책 모두 Okay! → 하지만 여기에는 '도시권 관점의 공간전략'이 미흡
- 대도시권에는 이런 정책들을 통해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거점 공간이 필요
-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거점의 강화를 위해 대학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함

# 04

## 수도권 쏠림 현상이 부르는 국가적 위기

2021 제2차  
고등교육 정책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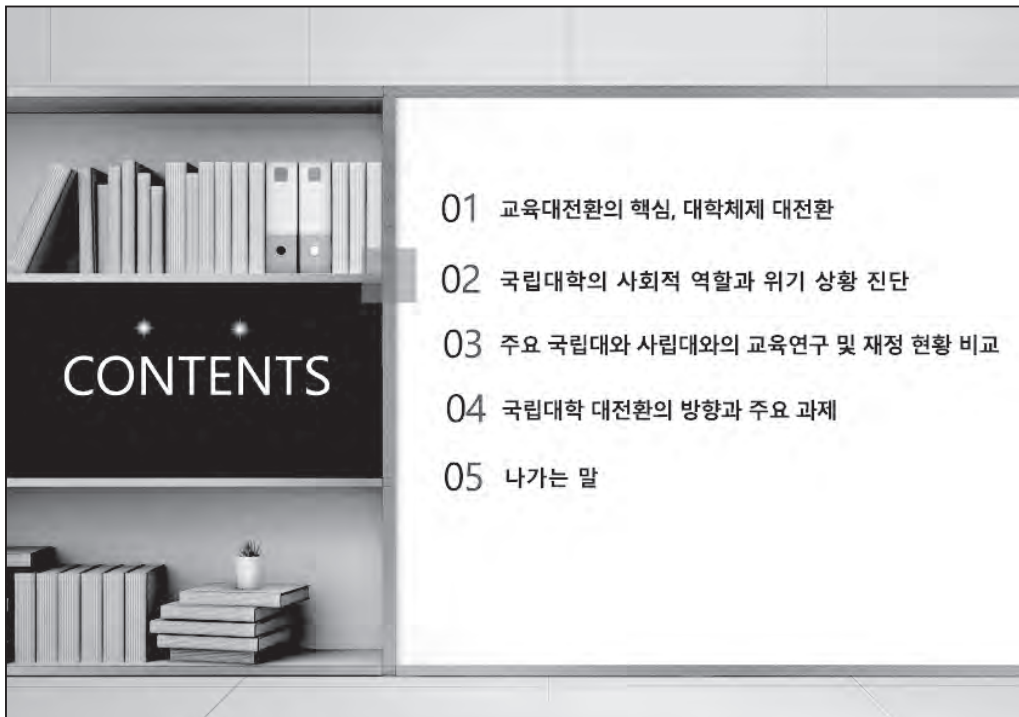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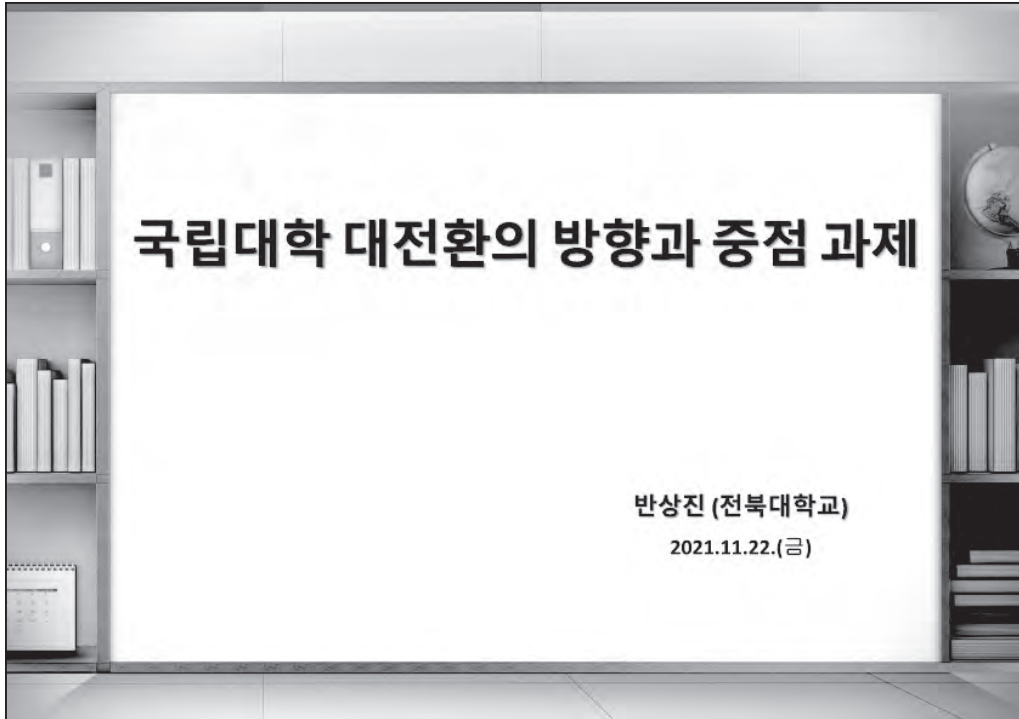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05

## 국립대학 대전환의 방향과 중점과제

반상진 교수 [전북대학교 교육학과]





### 1. 교육대전환의 핵심, 대학체제 대전환

가. 교육문제의 블랙홀 : 극단화된 대학서열구조와 학벌 중시 고용구조

• 교육의 병목 현상(김종영) : ✓ 서울 중심의 공간 병목  
 ✓ 명문대 중심의 대학 병목  
 ✓ 상대평가로 인한 시험 병목  
 ✓ 학벌구조에 의존한 계급 병목

← 교육문제의 핵심 연결고리

The diagram shows a flow from left to right. On the left, three circles represent 'Education' (교육 양극화), 'Education Inequality' (교육 불공정), and 'Education Leveling' (교육 불평등). These lead to a box containing 'Social Education' (사교육비 심화), 'Competitive Education' (성적 경쟁교육), and 'Overly Competitive University Admission' (과열 대학입시). This box leads to a box containing 'University Ranking' (학교(대학) 서열구조) and 'Job Market' (학벌중시 고용구조).

Gary Becker 교수(1930.12-2014.3); 시카고대학 교수, 1992년 노벨경제학상 수상

- 미국 사회가 PISA 등에서 미국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일본, 한국, 싱가포르보다 뒤떨어져 있음에 대한 우려 불식 충고
- 왜냐하면 아시아권 나라들은 초·중등교육단계까지는 build up하지만 대학단계에서는 build down하기 때문
- 미국의 교육경쟁력은 대학경쟁력에 있음을 강조

### 1. 교육대전환의 핵심, 대학체제 대전환

나. Hybrid Crisis, 대전환 시대, 고등교육은 위기 대응 및 미래 국가 성장의 핵심 동력

• 대학은 미래 인재 양성 기능 + 미래 가치와 지식 생산의 핵심 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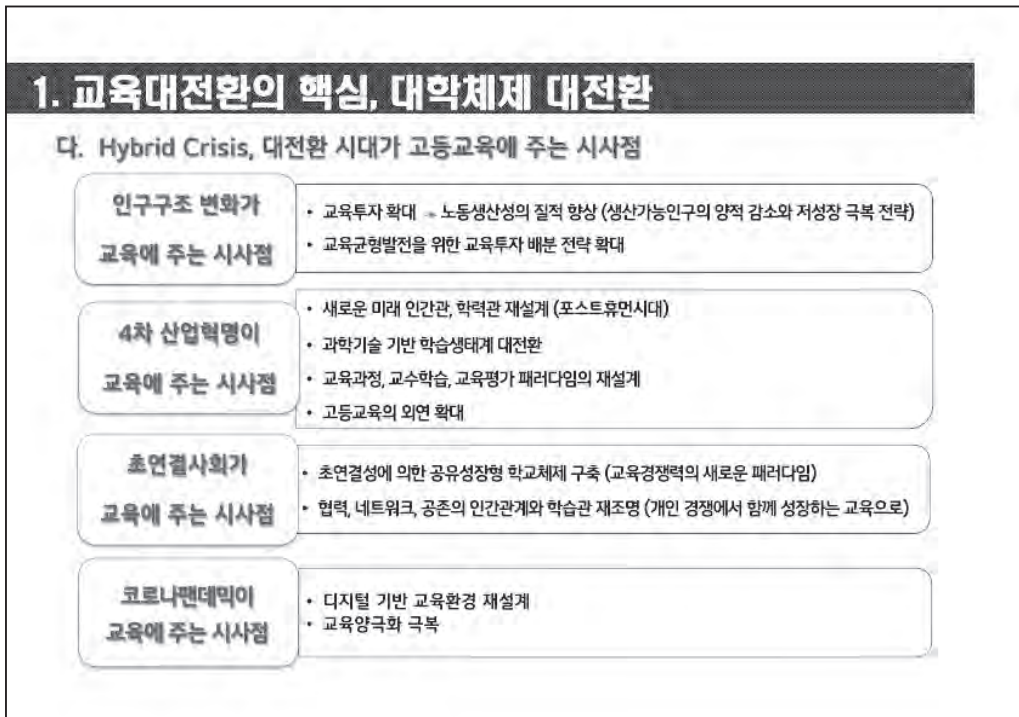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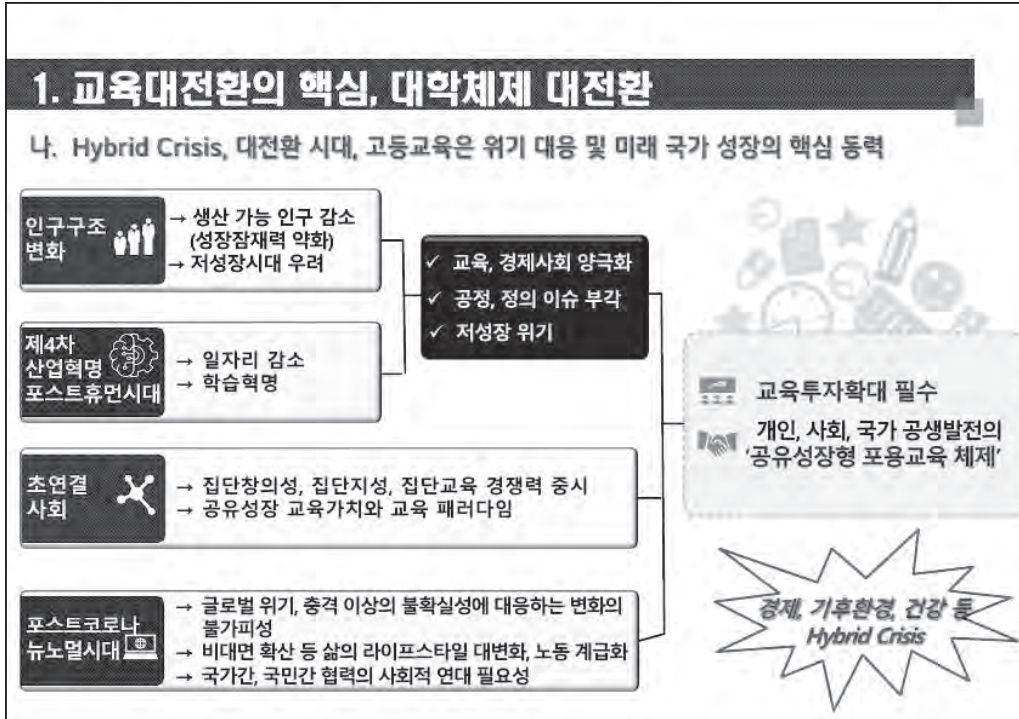
- ✓ Hybrid Crisis 시대, 4차 산업혁명, 초연결사회에서 대학은 새로운 질서와 가치 창출, 인재 양성의 핵심
- ✓ 미래 국가 성장 핵심, 인적자본의 질 향상 → 노동생산성의 질 향상 (생산가능인구의 양적 감소 극복) → 교육혁신 투자 확대

✧ 초중등교육은 민주시민 역량 강화를 목표로 교육 대전환의 전략 과제 모색해야 함.

조 바이든 교육공약(2020.7)

- 양극화 극복을 위한 중산층 복원, 10개 직업 중 6개가 고등교육 이상 학력 필요
- 중산층(년 125,000달러 미만의 가정 소득)에게 2년제와 4년제 공립대학 무상교육
- 학부 연방학자금 상환 50% 이상 삭감 등의 방안 제시





## 1. 교육대전환의 핵심, 대학체제 대전환

### 라. 대학체제 대전환에 대한 주요 질문

◆ 고정관념을 벗어난 새로운 사고(thinking outside the box)에 의한 고등교육 대전환 시대

- 1) 교육문제의 블랙홀, 대학서열구조와 학벌중시 고용구조를 혁파하기 위하여 대학체제는 어떻게 대전환해야 하는가?
- 2) 경제사회 초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교육체제 특히 대학체제는 어떻게 대전환해야 하는가?
- 3) 혼합위기 + 대전환 시대, 지속가능한 국가성장 잠재력의 핵심 요인인 고등교육의 대전환 방향은?
- 4) 결국 국가혁신과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 DNA는 대학의 경쟁력이 아닌가? 개별 대학경쟁력이 아닌 대학 전반의 체제 대전환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 2. 국립대학의 사회적 역할과 위기 상황 진단

### 가. 국가 공적 기관으로서 국립대학의 사회적 역할

-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한 국가경쟁력의 핵심 동력인 고등교육의 중심 기관
- 국립대학의 자원과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학벌주의 타파 (좋은 대학서열구조로의 전환촉)
- 국립대학을 지역명문대학으로 육성하여 성적 경쟁 입시 문화 해소, 사교육 완화, 초·중등교육 정상화
- 국립대학의 공공적 가치 실현으로 교육 양극화 해소
- 지역 소재 국립대학체제의 대전환으로 교육균형발전 실현
- 고등교육경쟁력의 선도적 위치로서 국립대학의 사회적 책무
- 민주시민 육성의 요람으로서의 국립대학의 교육적, 사회적 역할

2. 국립대학의 사회적 역할과 위기 상황 진단

나. 대학 위기 상황 진단 (국공립 및 사립대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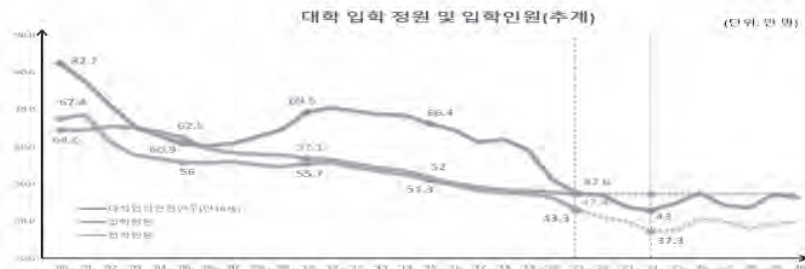
- 1) 고등교육체제의 기초 체력 붕괴
  -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입학정원이 신입생수를 넘어서는 역전 현상 본격화
  - ✓ 지방 소재 대학 공동화 현상 심화
  - ✦ 대학가의 변화 움직임
    - 지난 2020년 10월 15일 서울대를 포함한 강원대·경북대·경상대·부산대·서울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 등 10개 대학들 '거점국립대학교 학생 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약' 체결
    - (21) 온·오프라인 학점교류 확대 및 전체 국립대로 확대 → (22-) 공동학위제 및 복수학위제 활성화 (교육부, 2021년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
- 2) 대학의 재정 위기
  - ✓ 사립대학 재정 압박과 운영 수지 적자인 대학 증가
  - ✓ 국립대학 재정 규모,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에 못 미치는 수준
- 3) 코로나 19 이후 경제침체로 인한 학생, 학부모 교육비 부담 증가
- 4) 지역간 대학의 교육과 연구 격차 : 정권별 지방대 육성 정책의 한계
  - ✓ 지방 소재 대학에 대한 사회적 낙인 효과
  - ✓ 국·공립대학에 대한 문제 진단의 오류: 국·공립대학은 비효율적이고 경쟁력이 떨어지는가?
- 5) 대학에 대한 사회적 공신력 약화
  - ✓ 대학 스스로 교육과 연구의 질 혁신 능력이 있는가?
  - ✓ 정부 지원의 사업에만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닌가?

2. 국립대학의 사회적 역할과 위기 상황 진단

나. 대학위기 상황 (1): 고등교육체제의 기초 체력 붕괴

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입학 수요와 대학입학정원의 불일치

- 대학 입학 수요 < 대학 입학정원
- '21년 기점, 대학 입학연령(만 18세) 인구가 입학정원에 미달
- '24년까지 급감기를 거쳐 '30년까지 유사한 규모 유지 예상



주: 대학입학정원(만명): (05) 62.6 → (10) 57.2 → (15) 53 → (21) 47.4, 22년 이후 추정치  
출처: 교육부(2021)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

### 2. 국립대학의 사회적 역할과 위기 상황 진단

#### 나. 대학위기 상황 (1): 고등교육체제의 기초 체력 붕괴

② 지방 소재 대학 공동화 현상 우려 심화 (국립대 사례만으로도 심각)

- 지방 주요 9개 국립대 자퇴생, 2017년 3,981명, 2018년 4,438명, 2019년 4,793명
- 작년 전체 학생 가운데 2.4% 자퇴
- 미충원을 수도권 일반대(0.8%) < 비수도권 일반대(7.8%) < 수도권 전문대(13.4%) < 비수도권 전문대(17.3%) 순으로 미충원을 양호

**최근 3년간 지방 국립대 자퇴생 수**  
(단위:명) \*자료=교육부 대학알리미(2017~2019년)

경북대	2,050
부산대	1,679
전북대	1,663
경상대	1,606
강원대	1,443
충남대	1,370
전남대	1,291
충북대	1,148
제주대	972

출처: 매일경제, 2020.10.20

**<표 2-1> 2021년 수도권/비수도권 충원율**  
(단위:명, %)

구분	전체			일반대			전문대		
	모집인원	입학인원 (충원율)	미충원 (미충원율)	모집인원	입학인원 (충원율)	미충원 (미충원율)	모집인원	입학인원 (충원율)	미충원 (미충원율)
전국	473,189	432,603 (91.4)	40,586 (8.6)	318,013	301,617 (94.8)	16,396 (5.1)	155,176	130,986 (84.4)	24,190 (15.6)
수도권	190,066	179,938 (94.7)	10,128 (5.3)	122,065	121,036 (99.2)	1,029 (0.8)	68,001	58,902 (86.6)	9,099 (13.4)
비수도권	283,123	252,665 (89.2)	30,458 (10.8)	195,948	180,581 (92.2)	15,367 (7.8)	87,175	72,084 (82.7)	15,091 (17.3)

주: 2021년 대학 입학인원은 정원내 입학생 기준(정원 외 입학생 제외)  
출처: 교육부(2021)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

### 2. 국립대학의 사회적 역할과 위기 상황 진단

#### 나. 대학위기 상황 (2): 대학재정 위기

- 정부예산 대비 교육부예산 비율은 정부의 교육에 대한 투자 의지를 가능해 볼 수 있는 지표
- 경제위기 상황이지만, 국가투자우선순위에서 교육투자는 “상수”라는 국가교육관 절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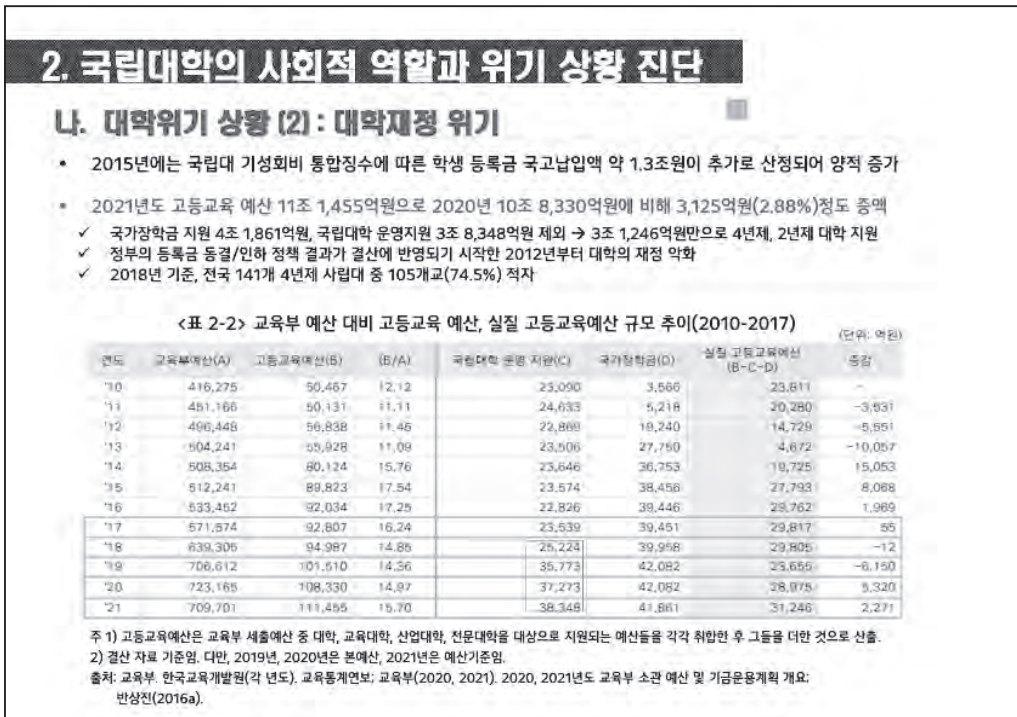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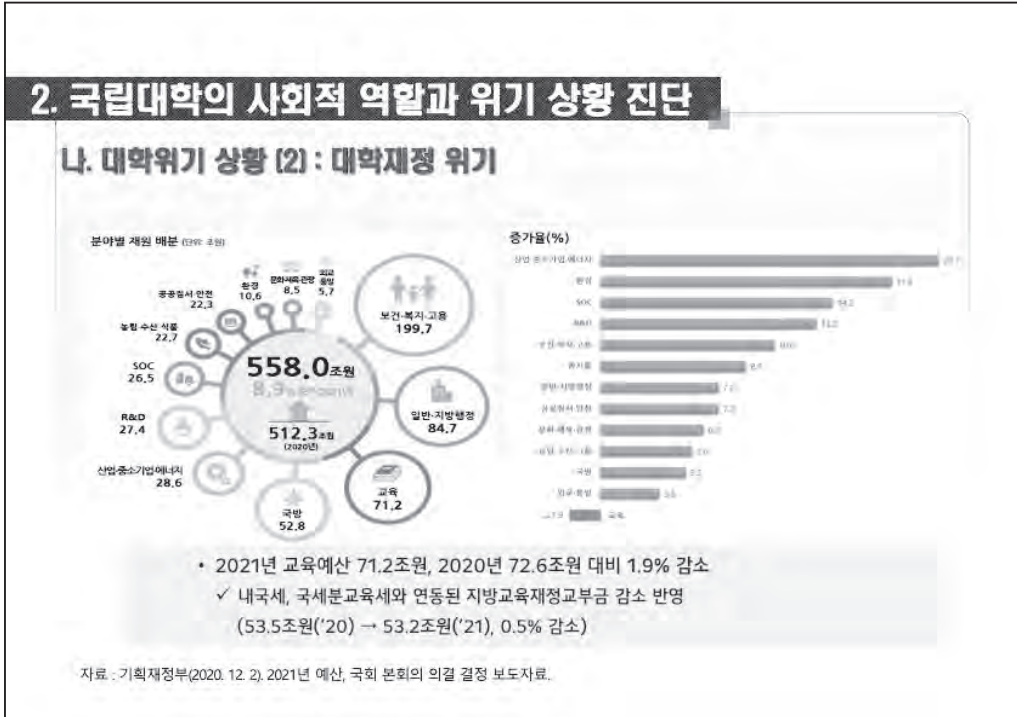
**<각 정부별 정부예산 대비 교육부예산 비율>**

- 국민의 정부(1999-2003): 19.9%
- 참여 정부(2004-2008): 18.2%
- 이명박 정부(2009-2013): 16.9%
- 박근혜 정부(2014-2017): 16.6%
- 문재인 정부(2018-2021, 4년 기준): 17.0%

**<각 정부별 정부예산 대비 고등교육예산 비율>**

- 국민의 정부(1999-2003): 2.3%
- 참여 정부(2004-2008): 1.7%
- 이명박 정부(2009-2013): 1.8%
- 박근혜 정부(2014-2017): 2.5%
- 문재인 정부(2018-2021, 4년 기준): 2.1%

**[그림 2-3] 연도별 정부예산 대비 교육부예산과 고등교육예산 비율 변화 추이**



### 2. 국립대학의 사회적 역할과 위기 상황 진단

#### 나. 대학위기 상황 (2): 대학재정 위기

• 국립대학 운영 지원 규모의 문제 (차시효과?)

<p>2018년 국립대학 운영지원: 2조 5,224억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국립대학 인건비: 15,618억원</li> <li>② 국립대학 기본경비: 1,392억원</li> <li>③ 국립대학 실험실습 기자재확충: 595억원</li> <li>④ 국립대학 교수 보직수행경비 지원: 193억원</li> <li>⑤ 국립대학 조교 연구성과금 지원: 20억원</li> <li>⑥ 특수목적대학 실습지원: 92억원</li> <li>⑦ 국립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 1,123억원</li> <li>⑧ 국립대학 시설확충: 5,230억원</li> <li>⑨ 국립대학 노후 선박건조 및 승선실습지원: 961억원</li> </ul>	<p>2019년 국립대학 운영지원: 3조 3,104억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국립대학 인건비: 16,204억원</li> <li>② 국립대학 기본경비: 1,411억원</li> <li>③ 국립대학 실험실습 기자재확충: 535억원</li> <li>④ 국립대학 교수 보직수행경비 지원: 193억원</li> <li>⑤ 국립대학 조교 연구성과금 지원: 20억원</li> <li>⑥ 특수목적대학 실습지원: 93억원</li> <li>⑦ 국립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 1,194억원</li> <li>⑧ 국립대학 시설확충: 6,093억원</li> <li>⑨ 국립대학 노후 선박건조 및 승선실습지원: 424억원</li> <li>⑩ 국립대학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소송관련 지급금(신규): 850억원</li> <li>⑪ 서울대학교 출연 지원: 4,576억원 (프로그램 이관: 대학교육 역량강화 → 국립대학 운영지원)</li> <li>⑫ 인천대학교 출연 지원: 880억원 (프로그램 이관: 대학교육 역량강화 → 국립대학 운영지원)</li> <li>⑬ 국립대병원 지원: 631억원 (프로그램 이관: 대학교육 역량강화 → 국립대 운영지원)</li> </ul>	<p>2021년 국립대학 운영지원: 3조 8,348억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국립대학 인건비: 1조 7,215억원</li> <li>② 국립대학 기본경비: 1,433억원</li> <li>③ 국립대학 감사 처우개선: 1,559억원</li> <li>④ 국립대학 육성사업: 1,500억원</li> <li>⑤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1,493억원</li> <li>⑥ 국립대학 교수보직수행경비 지원: 192억원</li> <li>⑦ 국립대학 조교 연구성과금 지원: 20억원</li> <li>⑧ 특수목적대학 실습지원: 88억원</li> <li>⑨ 국립대학 정보통신(ICT) 고도화 사업(경부화): 136억원</li> <li>⑩ 국립대학 시설확충: 7,710억원</li> <li>⑪ 국립대학 노후 선박건조 및 승선실습지원: 309억원</li> <li>⑫ 서울대학교 출연 지원: 5,124억원</li> <li>⑬ 인천대학교 출연 지원: 1,000억원</li> <li>⑭ 국립대병원 지원: 568억원</li> </ul>
---------------------------------------------------------------------------------------------------------------------------------------------------------------------------------------------------------------------------------------------------------------------------------------------------------------------------------------------------------------------------------------	--------------------------------------------------------------------------------------------------------------------------------------------------------------------------------------------------------------------------------------------------------------------------------------------------------------------------------------------------------------------------------------------------------------------------------------------------------------------------------------------------------------------------------------------------------------------------------------------------------------------------------------	--------------------------------------------------------------------------------------------------------------------------------------------------------------------------------------------------------------------------------------------------------------------------------------------------------------------------------------------------------------------------------------------------------------------------------------------------------------------------------------------------------------------------------------------------------------

### 2. 국립대학의 사회적 역할과 위기 상황 진단

#### 나. 대학위기 상황 (2): 대학재정 위기

- 2017년 기준 한국 GDP 규모 세계 11위권, OECD 국가 중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수준 하위권(29위권)
- 허약한 정부의 대학투자 구조: 대학과 학생 모두 힘겨운 상황

<표 2-3> 국가경제규모, 연간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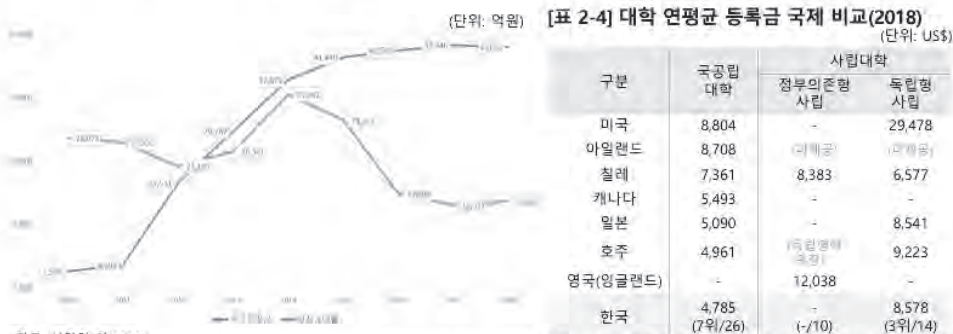
발표 연도	기준 연도	구분	국가 총 GDP (Billion US \$)	국민 1인당 GDP (US \$)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정부 부담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금액 (US \$)	1인당 GDP 대비 비율(%)	금액 (US \$)	1인당 GDP 대비 비율(%)
2014	2011	OECD 평균	1,339	37,561	13,958	37.2	9,221	24.5
		한국	1,559	31,228	9,927	31.8	3,076	9.9
2019	2016	OECD 평균	2,058	41,919	15,556	37.1	10,267	24.5
		한국	1,903	37,143	10,486	28.2	3,985	10.7
2020	2017	OECD 평균	2,141	44,992	16,327	36.3	11,102	24.7
		한국	1,998	38,823	10,633	27.4	4,041	10.4

주 1) 국가경제규모는 당해연도 명목 PPP GDP 규모임. 2)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GDP에 대한 \$PPP(미국) 환산액임.  
 자료 1) OECD(2014-2020), Educational at a Glance, OECD, National Accounts at a Glance, GDP(<https://stats.oecd.org>) 참조  
 2)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NA\\_TABLE1#](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NA_TABLE1#) (GDP per head, US \$, current prices, current PPPs)

**2. 국립대학의 사회적 역할과 위기 상황 진단**

**나. 대학위기 상황 (3) : 학부모, 학생 교육비 부담 증가**

- 세계적인 수준의 고액 대학등록금 수준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국가장학금은 4조원 전후로 지원
- 2014년 이후 학자금 대출 규모는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8년까지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국가장학금은 정부재원 국가장학금(4.3조원)과 대학자체노력(3.1조원)으로 7.4조원을 마련하기 때문에, 대학에게 재정적 부담 가중



자료: 서영민 외(2020).

[그림 2-5]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의 연도별 지출 총액 변화

**2. 국립대학의 사회적 역할과 위기 상황 진단**

**나. 대학위기 상황 (4) : 지역간 대학의 교육과 연구 격차**

- 지방 소재 대학에 대한 사회적 낙인 효과
- 반상진(2011)의 분석 틀에 근거하여 지역간 대학교육과 경제 관련 요인을 투입·과정·산출 요인으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지역간 불균형의 수준을 각 요인 별로 분석하였음

<표 2-5> 지역간 대학교육 투입 요인 수준 비교 분석(2019년 기준)

( ): %

구분	재학생수 (명)(A)	대학교육 투입 요인 총량						평균 (B)	B/A
		대학수 (개)	교수수 (명)	대학재정지원 (억원)	대학당 재정지원 (억원)	대학등록금 (백만원)	비율 합계		
전국	2,001,643 (100.0)	191 (100.0)	65,909 (100.0)	66,007 (100.0)	345.6 (100.0)	6,741 (100.0)	500	100.0	1.00
수도권	786,950 (39.3)	71 (37.2)	26,413 (40.1)	31,797 (48.4)	447.8 (61.4)	7,596 (54.9)	242	48.4	1.23
지방	1,214,693 (60.7)	120 (62.8)	39,496 (59.9)	33,855 (51.6)	282.1 (38.6)	6,241 (45.1)	258	51.6	0.85

주: 1)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를 포함함.  
2) 대학재정지원 자료는 2018년 기준임.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취업동계연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

### 2. 국립대학의 사회적 역할과 위기 상황 진단

#### 나. 대학위기 상황 (4) : 지역간 대학의 교육과 연구 격차

<표 2-6> 지역간 대학교육 과정 요인 수준 비교 분석(2019년 기준)

구분	재학생 수(명) (A)	대학교육 과정 요인 총량						B/A
		신입생 경쟁률 (%)	신입생 총원률 (%)	중도탈락률 (%)	교수1인당 학생수 (명)	비율 합계	평균 (B)	
전국 평균	2,001,643 (100.0)	9.4	98.8	4.56	23.6	-	-	-
수도권	786,950 (39.3)	13.6 (66.2)	99.4 (50.2)	3.34 (38.5)	23.2 (49.2)	204.1	51.03	1.30
지방	1,214,693 (60.7)	7.0 (33.8)	98.5 (49.8)	5.34 (61.5)	24.0 (50.8)	195.9	48.98	0.81

주: 1) 신입생경쟁률 = 정원내 지원자수 / 정원내 모집인원  
 2) 신입생총원률 = 정원내 입학자수 / 정원내 모집인원 x 100  
 3) 교수 1인당 학생수는 편제정원 기준임  
 4) 중도탈락률은 2018년 기준임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연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

### 2. 국립대학의 사회적 역할과 위기 상황 진단

#### 나. 대학위기 상황 (4) : 지역간 대학의 교육과 연구 격차

<표 2-7> 지역간 대학교육 산출 요인 수준 비교 분석(2019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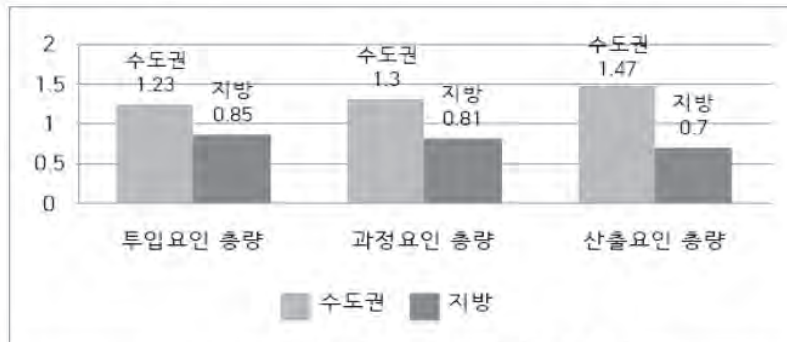
구분	재학생수 (명)(A)	대학교육 산출 요인 총량					기술이전수입료 (천원)
		정규 취업률 (%)	진학률 (%)	교수1인당 국내논문수(편)	교수1인당 국외논문수(편)	교수1인당 연구비 (백만원)	
전국 평균	2,001,643 (100.0)	64.2	6.72	0.55	0.42	168.0	1,204
수도권	786,950 (39.3)	66.9 (51.6)	9.03 (63.1)	0.54 (49.1)	0.52 (59.4)	216.3 (61.9)	1,558 (62.1)
지방	1,214,693 (60.7)	62.6 (48.4)	5.27 (36.9)	0.56 (50.9)	0.35 (40.6)	133.3 (38.1)	951 (37.9)
구분	대학교육 산출 요인 총량				B/A		
	특허등록(건)	특허출원(건)	비율 합계	평균 (B)			
전국 평균	0.19	0.32	-	-	-		
수도권	0.22 (56.7)	0.38 (57.2)	461.1	57.64	1.47		
지방	0.17 (43.3)	0.28 (42.8)	338.9	42.36	0.70		

주: 1) 정규 취업률 및 진학률은 2018년 12월 31일 기준임.  
 2) 논문수, 연구비, 기술이전수입료, 특허 관련 자료는 2018년도 기준임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연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



**2. 국립대학의 사회적 역할과 위기 상황 진단**

**나. 대학위기 상황 (4) : 지역간 대학의 교육과 연구 격차**



[그림 2-6] 지역간 대학교육의 불균형 지수 비교

**2. 국립대학의 사회적 역할과 위기 상황 진단**

**나. 대학위기 상황 (5) : 대학에 대한 사회적 공신력 약화**

- 대학 스스로 교육과 연구의 질 혁신 능력이 있는가?
- 정부 지원의 사업에만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닌가?

<표 2-8> 대학교육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 기능에 대한 평가(2015~2020)

(단위: %)

대학교육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 기능에 대한 평가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4년제 대학		전문대학		전체	대학생 학부모	전체			
	전체	대학생 학부모	전체	대학생 학부모						
매우 그렇다	2.4	1.6	2.0	2.7	0.4	0.4	1.0	0.9	1.3	1.1
그렇다	15.4	15.5	19.9	25.8	4.6	4.7	6.5	7.3	7.5	7.6
보통이다	44.3	41.5	49.9	47.3	39.6	40.3	32.7	32.8	33.1	31.7
그렇지 못하다	30.1	34.5	22.5	19.4	45.3	47.7	43.8	41.6	40.0	41.9
전혀 그렇지 못하다	7.9	6.9	5.7	4.8	10.1	7.0	16.2	17.6	18.3	17.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출처 : 임소현 외(2020).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20).

### 2. 국립대학의 사회적 역할과 위기 상황 진단

#### 다. 정부의 대응 (1): 「대학혁신 지원방안(2019.8.6)」 발표

① 배경

- 제4차 산업혁명과 인구감소 등 지역의 위기 극복을 위한 대학의 역할 변화, 2022년까지 수행해야 할 과제

② 정책 기조

혁신의 주제로 서는 대학  
대학의 자율혁신을 지원하는 지역과 정부

인구구조 변화 > 대학 규모 조정 불가  
4차 산업혁명 \* 미래인재 양성 필요  
지역 위기 \* 지역대학의 역할 요구 증가

혁신의 주제는 "대화"

교육·연구 혁신    지역 혁신, 신뢰 회복    특성화 및 격장규외화

지역    지자체-대학    지역발전 전략    대학-지역의    규제 개선 및 재정 확충  
협력기반    지역 사회·산업    자율 혁신    평가 체제 개선  
혁신    수요 대응    지원    지역대학 육성지원

③ 정책 비전, 4대 정책방향과 7대 혁신

비전    대학의 자율혁신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

- 1 미래대비교육·연구혁신
  - 1 교육혁신    국가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혁신
  - 2 연구혁신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연구혁신
- 2 지역인재 양성혁신체계구축
  - 3 지역혁신    지자체-대학    협력을 통한 지역혁신
- 3 자율, 복수의 혁신기반 조성
- 4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학혁신
- 4 교육혁신    대학의 경쟁성 제고를 위한 교육혁신
- 5 운영혁신    연구윤리 확립, 사학혁신,    대학운영의 책무를 제고
- 6 평가혁신    대학의 자율혁신을 위한    평가체제 개선
- 7 지역혁신    특성화 지원 제량체제 혁신

고등교육 재정확충    범부처 인재양성 협업체계 구축

### 2. 국립대학의 사회적 역할과 위기 상황 진단

#### 다. 정부의 대응 (2):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2021.2.28)」 발표

① 배경

- 「지방대학육성법」 제5조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 기본계획
- ✓ 제1차 기본계획('16-'20)은 10개 관계부처와 14개 비수도권 시·도가 합동으로 수립한 최초의 종합계획

② 정책 기조

비전    대학과 지역, 미래를 여는 혁신공동체

3대 정책영역

- 지방대학 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혁신
- 지역인재 정착을 위한    지역혁신
- 지역혁신 주체간    협업

### 2. 국립대학의 사회적 역할과 위기 상황 진단

**다. 정부의 대응 (3): 「2021년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 (2021.3.9)」 발표**

① 배경

- 국립대학은 “국립”으로서의 공공성 강화와 “대학”으로서 교육·연구의 경쟁력 제고 동시 요구
- 우수 지역인재 양성 및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국립대의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재정지원 지속 필요

② 정책 기초

<b>비전</b>	국가 균형발전을 이끄는 고등교육생태계 조성
<b>목표</b>	지역혁신의 거점으로서 국립대학의 공공성 및 경쟁력 강화
<b>주요 추진 과제</b>	<b>1. 지역사회 기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립대의 자원 공유</li> <li>국립대·지역 협력에 기반한 지역 교육 혁신 모델 마련 등</li> </ul>
	<b>2. 기초·보호학문 육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초학문 분야 연구자 및 학문우수세대 지원 확대</li> <li>학술자원공유 등</li> </ul>
	<b>3.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사 교류·자원 공동 관리 등 대학간 공유 협력 활성화</li> <li>해외 대학과 교류 확대</li> </ul>
	<b>4. 고등교육 기회확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인재 및 취약계층의 고등 교육 기회 확대</li> </ul>
	<b>5. 특화전략 및 발전모델 구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립대와 차별화되는 국립대 고유 발전 모델 구축</li> <li>대학 특성화 및 발전계획과 연계한 핵심 역량 육성</li> </ul>
<b>추진 전략</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과 관리 강화 등 사업추진의 효과성 및 책무성 제고</li> <li>대학 협의체(발전협의회, 국립대총장협의회 등)와 소통 강화</li> <li>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 확산</li> </ul>

### 2. 국립대학의 사회적 역할과 위기 상황 진단

**다. 정부의 대응(4):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 (2021.5.20)」 발표**

① 정책 기초

- ✓ 대학의 자율혁신에 기반한 적정 규모화 추진, 부실 대학 구조개혁 및 퇴출 추진, 개방·공유·협력을 통해 동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

② 비전 및 목표

<b>비전</b>	지역과 함께, 미래 발전을 선도하는 대학			
<b>목표</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율혁신에 기반한 적정 규모화 및 질적 혁신 촉진</li> <li>부실대학은 과감한 구조개혁 및 퇴출 추진</li> <li>개방·공유·협력 기반 동반 성장 지원</li> </ol>			
<b>전략 및 혁신과제</b>	<b>대학의 체계적 관리</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계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감한 구조개혁</li> <li>적기 시정조치 및 폐교·정산 절차 체계화</li> </ul> </li> <li>자율혁신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별 자율혁신계획 수립·추진</li> <li>정원 조정 유연화</li> <li>평생직업교육체제 전환 지원</li> </ul> </li> </ol>			
	<b>공유협력 기반의 대학 혁신 지원</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등교육 재정 확충</li> <li>지자체·대학 지역 협업체계 구축</li> <li>공유·협력을 통한 대학 혁신 역량 강화</li> <li>지역 거점으로서 국립대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대 권역별 공동교육혁신체제 등</li> </ul> </li> </ol>			
<b>기본 방향</b>	<table border="1"> <tr> <td>공유·협력</td> <td>자율혁신</td> <td>규제혁신</td> </tr> </table>	공유·협력	자율혁신	규제혁신
공유·협력	자율혁신	규제혁신		

### 2. 국립대학의 사회적 역할과 위기 상황 진단

#### 라. 정부의 대응에 대한 의견

- 고등교육 현실에 대한 문제인식은 명료하지만, 기존의 정책과의 차별성은?
  - ✓ 예) '지방대학 혁신 전략'은 기존 정권에서 추진했던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과 어떤 차별이 있는지?
  - ✓ '지역혁신 및 협업 전략'은 참여정부 RIS 사업과 어떤 차별이 있는지?
- 5년 동안 단기 사업 중심의 정책이 정권에 따라 폐지 여부에 영향을 받는 현실은?
- 대학혁신을 위한 투자 규모는 충분한가?
  - ✓ ● 지자체-대학 지역혁신 플랫폼 확대 및 혁신모델 확산 (1,700억원), ● '디지털 혁신 공유대학'을 통한 수도권-지방 상생 모델 창출 (832억) 정도만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그 외 일반재정지원사업 개편 및 규모 확대라는 선언적 의미만 제시되어 있음.
  - ✓ 국립대학 육성사업도 2021년 1,491억 원 (국립대 38개 평균 39억원)으로 기대하는 효과를 얻을 정도로 충분한가?
- 지자체와 대학 협력 관계와 더불어 대학간 연계·협력에 의한 대학체제의 대전환 개편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마련이 필요
- 고등교육발전의 필수조건인 고등교육재정 확충 방안 마련이 절대적 과제임.

### 3. 주요 국립대와 사립대학의 교육연구 및 재정 현황 비교

#### 가. 설립별 대학의 교육 여건 현황 비교

- 분석 대상 대학 비교 결과, 사립대가 재학생수와 전임교수수 규모는 국립대보다 많음.
- 하지만, 국립대가 사립대학에 비해 전임교수 1인당 학생수가 적어 교육여건 양호

<표 3-1> 설립별 재학생수, 전임교수수, 전임교수 1인당 학생수 현황 비교(2021)

(단위: 명)

구분	평균 재학생수	평균 전임교수수	전임교수 1인당 학생수
국립대	21,122	1,020	21.3
사립대	25,646	1,161	25.7

주 : 1) 국립대는 9개 가정 국립대학교, 사립대는 이화여대, 연세대, 한양대, 중앙대, 고려대, 건국대, 경희대, 성균관대, 동국대 등 9개 대학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2) 전임교수 1인당 학생수 = 재학생수/전임교수수  
자료 : 대학알리미.

**3. 주요 국립대와 사립대와의 교육연구 및 재정 현황 비교**

**나. 설립별 대학의 교육과 연구 성과 비교**

- 사립대가 학부 중도탈락률은 낮고, 대학원 진학률과 취업률 보다 높음.
- 분석 대상 대학이 국립대는 지방 소재 대학교이고, 사립대는 서울 소재 대학교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대학교육의 영향인지, 지역적 영향인지는 좀더 과학적 검증이 필요함.

<표 3-2> 설립별 대학생 중도탈락률, 대학원 진학률, 취업률 비교

구분	학부 중도탈락률(% , 2021)	대학원 진학률(% , 2019)	취업률(% , 2019)
국립대	3.6	8.4	57.2
사립대	3.0	12.9	70.7

주 : 1) 국립대는 9개 거점 국립대학교, 사립대는 이화여대, 연세대, 한양대, 중앙대, 고려대, 건국대, 경희대, 성균관대, 동국대 등 9개 대학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2) 중도탈락학생비율(%) = 중도탈락학생수/재학생수  
자료 : 대학알리미.

**3. 주요 국립대와 사립대와의 교육연구 및 재정 현황 비교**

**나. 설립별 대학의 교육과 연구 성과 비교 : 국립대 연구 역량, 고효율 구조**

- 국립대 교수들이 상대적으로 사립대 교수에 비해 낮은 연구비를 받고 있지만, 연구실적은 전반적으로 사립대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비용 대비 연구 성과(연구 효율성) 결과를 보면, 더욱 국립대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결국, 국립대 연구 역량이 상대적으로 저비용, 고성능의 고효율 구조를 가지고 있음.
- 국립대가 비효율적이고 경쟁력이 떨어지는가?

<표 3-3> 설립별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및 논문 실적 비교(2020)

구분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수혜 실적(천원)(A)	전임교원 1인당 논문(편)		전임교원 1인당 저·역서 실적(권)(D)	연구 효율성		
		등재지 후보 포함 (B)	SCI/SCOPUS (C)		B/A	C/A	D/A
국립대	195,068.3	0.54	0.55	0.07	0.028	0.028	0.004
사립대	282,709.7	0.45	0.74	0.06	0.016	0.026	0.002

주 : 1) 국립대는 9개 거점 국립대학교, 사립대는 이화여대, 연세대, 한양대, 중앙대, 고려대, 건국대, 경희대, 성균관대, 동국대 등 9개 대학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2) 연구 효율성은 교원 1인당 연구비 천만원 지원 대비 연구 결과 비율을 의미함.  
자료 : 대학알리미.

### 3. 주요 국립대와 사립대와의 교육연구 및 재정 현황 비교

#### 다. 설립별 대학의 재정 현황 비교

- 분석 대상 대학 비교 결과, 국립대 평균 총교육비 3,918.5억원, 사립대 5,700억원
  - ✓ 국립대 총교육비는 사립대 대비 68.7% 규모
- 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 18.5백만원, 사립대 21.7백만원
  - ✓ 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사립대 대비 85.2% 규모
- 국립대 학생 1인당 장학금 270만원, 사립대 327만원
  - ✓ 국립대 학생 1인당 장학금은 사립대 대비 82.7% 규모

<표 3-4> 설립별 학생 1인당 교육비 현황 비교(2020)

(단위: 원)

구분	총교육비(평균)	학생 1인당 교육비	학생 1인당 장학금 금액
국립대	391,853,037,964	18,508,744	2,703,159
사립대	569,990,446,144	21,686,914	3,268,165

주 : 1) 국립대는 9개 거점 국립대학교, 사립대는 이화여대, 연세대, 한양대, 중앙대, 고려대, 건국대, 경희대, 성균관대, 동국대 등 9개 대학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2) 국립대 총교육비는 대학회계, 발전기금, 산학협력단회계, 도서관임비, 기계기구매입비 포함.  
3) 사립대 총교육비는 교비회계, 산학협력단회계, 도서관임비, 기계기구매입비 포함.  
자료 : 대학알리미.

### 4. 국립대학 대전환의 방향과 주요 과제

#### 가. 대학체제, 공유 협력체제로 대전환해야 하는 이유

##### 1) 역사적 변혁의 두 가지 틀

a.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Occupy Wall Street (We are the 99%)

- 지난 1990-2000년대 세계화, 신자유주의 패러다임 국가발전전략에 의해 차별과 배제 논리, 양극화 심화
- 2012년 WEF 주제, "대전환(Great Transformation)" →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에 대한 반성과 대안 모색
- 소유의 종말('01), 한계비용 제로 사회('14) (제레미 리프킨) → 향후 사회는 공유 협력의 세계로 전환
- 세계경제체제 극복과 미래 사회 패러다임 변혁 과정에서 '초국가적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

b. 2019년 코로나 팬데믹 뉴노멀사회, 혼합위기(Hybrid Crisis)

- 코로나 19 파급효과
  - ✓ 국제건강 위기, 국제경제 위기, 국제리더십 및 질서의 혼돈, 기후 위기, 초양극화 등 혼합 위기 국면
- 포스트코로나 시대, 뉴노멀 사회, 생명, 인간 가치 중심 사회
  - ✓ 인간의 라이프 스타일 전환, 모든 분야의 새로운 가치와 질서, 트렌드와 패러다임 변혁, "연대와 협력"의 시대

#### 4. 국립대학 대전환의 방향과 주요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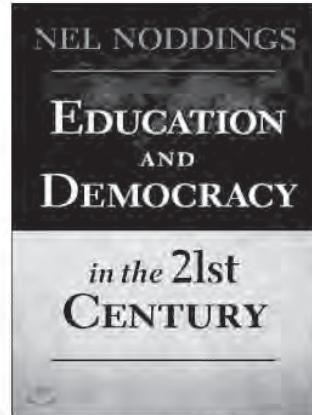
##### 가. 대학체제, 공유 협력체제로 대전환해야 하는 이유

###### 2) 이론적 근거 (1)

스탠포드대학 명예교수인 넬 노딩스(2016)는 “학교는 삶의 세 영역(가정적 삶, 직업적 삶, 시민적 삶)의 욕구를 다루는 다목적 공간”으로 규정

“국제적 시험 성적은 잘못 안내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 지금은 21세기이며 경쟁에 대한 강조가 줄어들고 있는 시대이다.”(38쪽).

오늘날 교육의 핵심어는 협력, 대화, 상호 의존, 창의성입니다 (38쪽). 학생들의 현실 생활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교육과정 그리고 교과목의 더욱 정교한 분리 경향에 효과적인 저항을 하려면 협력, 비판적 사고, 창의성, 속의 민주주의, 평등하고 상호 소통하는 대화, 생태적 세계시민주의 실현이 필요(55쪽)



심성보 역(2016). 21세기 교육과 민주주의 - 개인적 삶, 직업적 삶, 그리고 시민적 삶을 위한 교육.

#### 4. 국립대학 대전환의 방향과 주요 과제

##### 가. 대학체제, 공유 협력체제로 대전환해야 하는 이유

###### 2) 이론적 근거 (2)



오늘날 고등교육기관이 처해 있는 현실

- ✓ 학생 수 감소, 대학재정 압박, 대학의 국제적 명성 확보 및 유지, 연구인재 및 재정 지원 경쟁 심화

고등교육기관간의 협력, 제휴, 합병 중요성 부각

- ✓ 학문 발전과 성과, 경제적 효율성 기여
- ✓ 정부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은 필수



OECD(2017). Education Working Papers No. 160

### 4. 국립대학 대전환의 방향과 주요 과제

#### 가. 대학체제, 공유 협력체제로 대전환해야 하는 이유

##### 3) 실질적 근거 (1): 규모의 경제(scale of economy)에도 못 미치는 한국 대학재정 규모, 공유협력해야

- 대학간 자원 공유를 통해 새로운 대학경쟁력을 모색해야 함.
- 한국의 주요 사립대와 국립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수는 외국 우수 대학에 비해 전반적으로 많음 편임.
- 하지만 교수수는 서울대를 제외하고 외국 대학의 60% 내외 수준의 교수를 확보하고 있음.
- 특히 대학예산은 외국 대학에 비해 국사립대학을 막론하고 1/10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결국 국내 대학은 규모의 경제에 못미치는 열악한 재정 상황임.

<표 3-2> 한국, 미국, 일본 국가 경제규모 비교 (2020년 추정 기준, IMF)

구분	한국	미국	일본
GDP(\$)	1조 5,868억(10위)	20조 8,073억(1위)	4조 9,106억(3위)
1인당 명목 GDP(\$)	30,644(26위)	63,051(5위)	39,048(22위)

### 4. 국립대학 대전환의 방향과 주요 과제

#### 가. 대학체제, 공유 협력체제로 대전환해야 하는 이유

##### 3) 실질적 근거 (2): 규모의 경제(scale of economy)에도 못 미치는 한국 대학재정 규모, 공유협력해야

<표 3-3> 국내외 대학간 학생수, 교수수, 대학예산 규모 비교

국내 대학				해외 대학			
대학명	학생수	전임 교수수	예산 (억원)	대학명	학생수	전임 교수수	예산(\$)
서울대 (국립법인)('19)	27,784	2,130	8,290	Harvard Univ. (사립)('19)	18,802	2,310	\$52억 (6조 2,400억원)
연세대 (사립)('20)	28,925	1,695	5,859	Stanford Univ. (사립)('20)	16,384	2,276	\$68억 (8조1,600억원)
고려대 (사립)('20)	29,580	1,477	6,544	Univ. of Chicago (사립)('20)	17,170	2,377	\$51.6억(6조1,920억원)
성균관대 (사립)('20)	27,100	1,487	6,238	Columbia Univ. (사립)('20)	27,114	1,602	\$50.3억(6조360억원)
부산대 (국립)('19)	27,830	1,187	3,708	Univ. Of Wisconsin-Madison(공)('20)	37,931	2,112	\$31.9억(3조8,280억원)
경북대 (국립)('20)	27,862	1,196	3,294	Univ. of California-Berkeley(공)('19)	42,347	1,529	\$30억(3조6,000억원)
전북대 (국립)('19)	21,757	1,042	2,526	동경대('20)	28,675	2,198	2,599억엔(2조8,100억원)

주: 1) 학생수는 학부, 대학원 재학생 기준임.  
2) 국내 대학 예산은 교비회계 기준임.  
3) 환율은 해당년도 기준으로 \$1 당1,200원으로 추정하였음.  
자료: 각 대학 홈페이지.



### 4. 국립대학 대전환의 방향과 주요 과제

#### 가. 대학체제, 공유 협력체제로 대전환해야 하는 이유

##### 3) 실질적 근거 (1): 규모의 경제(scale of economy)에도 못 미치는 한국 대학 교수 규모 공유협력해야

<표 3-4> 한국, 미국 4개 학과 교수 인원 비교

구분	사회학과	사학과	물리학과	수학과	구분	사회학과	사학과	물리학과	수학과
서울대	15	27	48	36	UC Berkeley	28	49	107	60
충북대	6	8	17	10	UCLA	35	70	70	58
충남대	5	6	18	16	UC San Diego	27	39	57	61
전북대	9	9	16	10	UC San Francisco	-	-	8	18
전남대	6	11	18	16	UC Santa Barbara	33	44	57	33
제주대	6	6	7	7	UC Irvine	35	32	49	37
국립경상대	7	7	9	7	UC Davis	21	38	49	51
부산대	7	12	18	16	UC Santa Cruz	17	29	21	16
경북대	8	10	18	16	UC Riverside	18	21	41	27
강원대	6	6	13	8	UC Merced	13	7	13	10
계	75	102	182	142	계	227	329	472	371

주: 서울대 사학과 교수진 수는 국사학과, 동양사학과, 서양사학과와 교수진의 수를 합한 것임.  
자료: 김승범(2017).

주: 1) UCLA, UC San Francisco, UC Irvine, 그리고 UC Riverside는 물리학과와 천문학과  
(Department of Physics and Astronomy)가 합쳐져 있고 이 숫자는 이 두 분과의 교수진을 합쳤다.  
2) UC Merced는 응용수학과(Department of Applied Mathematics)의 교수진 숫자임.  
자료: 김승범(2017).

### 4. 국립대학 대전환의 방향과 주요 과제

#### 나. 대학체제 대전환의 틀(Great Transformation Framework): 국립대, 사립대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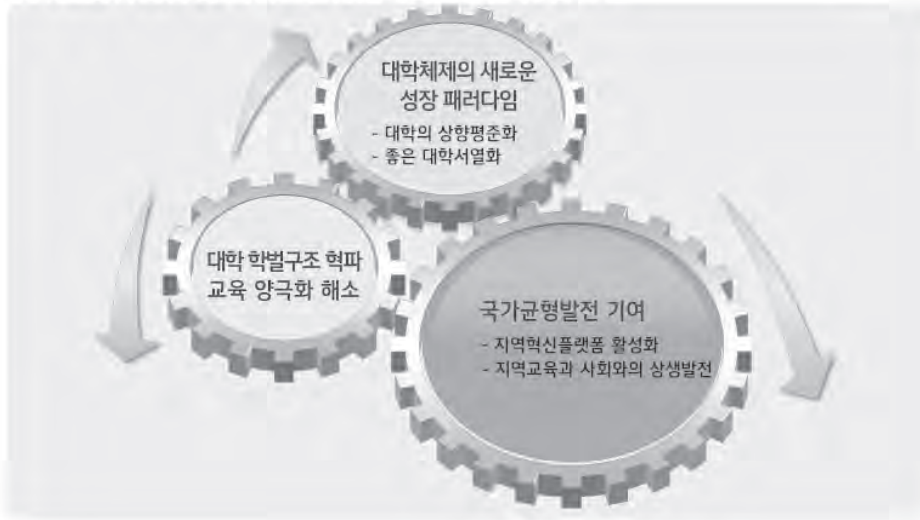


#### 정부의 역할

- ✓ 공정한 게임의 규칙
- ✓ 국가책임의 재정지원

### 4. 국립대학 대전환의 방향과 핵심 과제

#### 다-1). 공유성장형 대학연합체제 : 필요성과 지향점



### 4. 국립대학 대전환의 방향과 핵심 과제

#### 다-2). 공유성장형 대학연합체제 : 개념과 방향

##### ① 개념

- 공유성장형 대학연합체제는
  - ✓ 대학 간 물적·인적 자원 공유와 연계로 교육과 연구 역량의 상생 성장을 꾀하고,
  - ✓ 이를 통해 대학교육과 학위의 사회적 공신력을 확보하여
  - ✓ 개별 대학의 경쟁력이 아닌 대학체제의 경쟁력 강화를 지향하는 공유성장체제를 의미함.

##### ② 방향

<b>내재적 역량 강화</b>	대학간 자원 공유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공유성장형 대학연합체제 구축 • 학벌주의 타파, 사회양극화를 완화하는 계층사다리 역할의 중심축(대학의 본질적 기능 회복) • 국립대연합체제 + 사립대연합체제 + 국립대·사립대연합체제 등으로 구성된 대학체제 대전환을 통한 대학균형발전과 새로운 대학경쟁력 강화(국공립대와 사립대의 상생발전) • 공유성장형 대학연합체제의 국제적 위상 제고(추격형 → 한국 주도 선도형) (대학 학위의 국제적 통용성 확보를 위한 국가간 대학 공동학위 복수학위 추진 지원, 북미, EU, Asia권 대학)
------------------	-------------------------------------------------------------------------------------------------------------------------------------------------------------------------------------------------------------------------------------------------------------------------------------------------------------

### 4. 국립대학 대전환의 방향과 핵심 과제

#### 다-21. 공유성장형 대학연합체제 : 개념과 방향

##### ② 방향

외재적 역량 강화

대학-지자체-산업체와의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혁신플랫폼 사업 제도화 및 확대

-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자체와 지역대학이 협업체계를 구축,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를 아우르는 선순환 구축
  - ✓ (2021년 예산) 4개 플랫폼 8개 지자체(광주·전남, 대전·세종·충남, 울산·경남, 충북) 약 2,439억 원 투입(국비 1,710억 원(70%), 지방비 약 729억 원(30%))
  - ✓ 현재 권역내 사업참여 대학 중심으로 과학기술 분야에 초점
  - ✓ 교육부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단년 사업), 사업 규모도 미흡하고 안정적인 인지는 여전히 모호
  - ✓ 지역 산업체가 지역혁신플랫폼에 참여할 유인가가 무엇인지 좀더 점검할 필요
- 지역혁신플랫폼 시스템은 법적 근거에 의한 안정적 체제로 정착
- 지역혁신플랫폼 시스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재정 규모 과감한 확대
- 권역내 참여 대학의 내부 역량 균등화를 위한 운영체제 구축
- 지자체와 산업체의 단순 협업체계를 넘어, 취업 공간을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산업체가 지역에 진입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강화



### 4. 국립대학 대전환의 방향과 핵심 과제

#### 다-4). 공유성장형 대학연합체제 : 기본 운영

##### ① 단계 (핵심 기반 조성) : 대학 자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선결조치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세정 등 재정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 강화 / 필수조건

대학발전지원법(가칭) 제정

고등교육법 개정, 국립대학법, 사립대학법 제정 등 대학 설치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지자체-대학-산업체간의 지역혁신체제(RIS)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행재정지원 강화

### 4. 국립대학 대전환의 방향과 주요 과제

#### 다-4). 공유성장형 대학연합체제 : 기본 운영 (국립대 중심으로)

##### ② 단계 (가-1) : 연구중심 국립대연합체제 운영 (대학원 수준)

"교육과정과 강의 개방, 학점교류, 교수교류" 등 확대

"대학원생 선발 공동 최소기준" 도입·운영

✓ 대학원생 선발 기준의 표준화를 통해 대학원생의 최소한의 질적 수준 확보와 중장기적으로 공동 대학원생 선발제 운영

"공동 지도교수제 및 공동학위제" 도입·운영

✓ "공동 지도교수제 및 공동학위제" 통해 동일한 졸업장 수여가 가능함으로써 연구중심 국립대연합체제 사실상 완성  
 ✓ "공동 지도교수제 및 공동학위제"를 통해 국립대 대학원생들의 질 향상, 학위과정의 투명성과 사회적 신뢰 구축을 통해 대학원 서열화 완화

"공동 연구 활성화를 위한 컨소시엄" 구축

✓ 연구중심 국립대간 공동 연구 컨소시엄을 활성화 지원  
 ✓ 연구윤리위원회 공동 운영으로 국립대 연구의 사회적 공신력 강화

"(가칭) 연구중심 국립대연합운영위원회" 설치·운영

- 「(가칭)국립대연합운영위원회」는 국가로부터 국립대학 경영 권한을 위임받는 주체이지 상위 의사결정기구  
 → 대학간 상호 자율협력체제 및 공조체제 모색할 수 있는 대학자치 운영기구
- (역할) 국립대 대학원의 전반적인 운영과 협의 사항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구 역할
  - 연구중심 국립대 연합체제 내에서 교수 및 학점 교류 완전 자율화
  - 연구중심 국립대 연합체제 내의 학생 선발, 교육과정, 학위 수여, 지도교수제 등에 대한 합의 도출
- (위원회 구성) 각 대학의 총장 및 교수 대표, 산업계 인사 및 사회 저명인사, 고등교육 관련 전문가 등
- (위원회 성격) 정부와 국립대학간의 재정 및 정책 등에 관한 조정기구(coordinating agency)의 성격

## 4. 국립대학 대전환의 방향과 주요 과제

### 다-4) 공유성장형 대학연합체제 : 기본 운영 (국립대 중심으로)

#### ② 단계 (가-2) : 권역별 국립대연합체제 운영 (학부 수준)

"교육과정과 강의 개발, 학점교류, 교수교류 등 확대"

"학력인증제" 도입-운영

- ✓ 국립대 학생들의 질 향상과 사회적 신뢰 구축

"공동 학생선발제" 도입-운영

- ✓ 권역별 국립대연합체제 내에서 학생선발 기준의 표준화를 통해 공동 학생선발제 운영
- ✓ 단순 우수 성적 학생 선발이 아닌 학생들 잠재성 중심의 역량 기준 선발, 성인학습자 입학 확대 등 가치기준 선발제

"공동학위제" 도입-운영

- ✓ '공동학위제' 통해 동일한 졸업장 수여가 가능함으로써 국립대연합체제 사실상 완성
- ✓ 공동학위제를 통해 국립대 학생들의 질 향상과 사회적 신뢰 구축을 통해 대학 서열화 완화

"(가칭) 권역별 국립대연합운영위원회" 설치-운영

- "(가칭)국립대연합운영위원회"는 국가로부터 국립대학 경영 권한을 위임받는 주체이자 상위 의사결정기구  
→ 대학간 상호 자율협력체제 및 공조체제 모색할 수 있는 대학자치 운영기구
- (역할) 국립대학연합체제의 전반적인 운영과 협의 사항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구 역할
  - 권역별 국립대학 연합체제 내에서 교수 및 학점 교류 완전 자율화
  - 권역별 국립대학 연합체제 내의 학생 선발, 교육과정, 학위 수여, 지도교수제 등에 대한 협의 도출
- (위원의 구성) 각 대학의 총장 및 교수 대표, 산업계 인사 및 사회 저명인사, 고등교육 관련 전문가 등
- (위원의 성격) 정부와 국립대학간의 재정 및 정책 등에 관한 조정기구(coordinating agency)의 성격

## 4. 국립대학 대전환의 방향과 핵심 과제

### 라. 국가책임 대학재정지원체제 개편

#### ① 대학재정 확보 전략 : (국공립대 무상화, 사립대 반값등록금)+대학지원 2배 확충

**1안**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 교육비 부담 경감 + 대학 체제 개편

-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이 상생하며 대학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관점에서 고등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관련 법안 제정 필요
- 고등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재원 확충 규모의 근거는 OECD 평균, 그에 따라 GDP 1.1%의 정부부담 고등교육재정 확보

**2안** "고등교육법" 개정 → 정부부담 고등교육재정의 일정 비율 확보

"고등교육법" 제7조 제3항(현행)	"고등교육법" 제7조 제3항(개정안)
㉔ 정부는 전체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여 2년마다 고등교육 지원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㉔ 정부는 전체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OECD 국가 평균 수준(혹은 GDP 6%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교육예산의 일정 비율을 확보하고, 이를 매년마다 고등교육재원 확보 및 운영 계획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 4. 국립대학 대전환의 방향과 주요 과제

#### 라. 국가책임 대학재정지원체제 개편

##### ① 대학재정 확보 전략

3만

대학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한시법 운영

- 지방대와 수도권 대학, 국공립대와 사립대가 상생하며 대학균형발전하여 고등교육시스템의 기초(fundamental)를 강화시킨다는 관점에서 '대학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5년 한시적으로 집중투자하는 방안
- ✓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2016.12)한 바 있고, 이는 2016년 기획재정부 최고의 정책으로 선정된 바 있었음.

4만

고등교육세 신설

기업의 사회적 책무성(법인세) + 소득 재배분(소득세)

- 대졸 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 고등교육지원 부담을 함께 나누어 대졸 인력 수요자에게 고등교육에 대한 책임감을 공유하기 위해 법인세에 고등교육세 부과
- 소득 재분배 효과를 얻기 위해 소득세에 고등교육세 부과
- ✓ 2020년 총 법인과세 규모는 55조 5,132억원, 법인세에 5% 고등교육과세를 하면 2조 7,757억원 추가 확보
- ✓ 2020년 총 소득세 과세 규모는 93조 1,087억원, 소득세에 10% 고등교육과세를 하면 4조 6,554억원 추가 확보
- ✓ 따라서 2020년 기준 국세분 고등교육세 7조 4,311억원 추가 독립재원 확보

### 4. 국립대학 대전환의 방향과 주요 과제

#### 라. 국가책임 대학재정지원체제 개편

##### ① 대학재정 확보 전략

5만

사립학교발전기금(가칭) 조성

사학진흥기금 확대 개편

- 현재 사학진흥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학진흥기금」은 사립대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유지하고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음.
- 사립대학의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위해 「사립학교발전기금」으로 확대 개편
  - ✓ 이 기금은 현행 정부에서 출연하는 사학진흥기금은 물론 고용기금, 복권기금 등 공적 기금을 출연기금으로 조성하고 상호 협력체제로 운영
  - ✓ 사학의 안정적 재정지원과 함께 사학운영의 투명성과 자율성, 책무성 강화를 자율적으로 유인할 수 있음.
  - ✓ 또한 국가가 강제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사립대학간의 연계, 합병을 자유롭게 유도하는 등 사학의 자율조정 장치로 활용

### 4. 국립대학 대전환의 방향과 주요 과제

#### 라. 국가책임 대학재정지원체제 개편

##### ② 대학재정지원의 다층화 전략

**대학재정지원의 다층화 전략** ✓ 일반지원사업 + 특수목적지원사업 + 대학간 혹은 사업단간(교수간) 컨소시엄 지원

구분	사업	사업목적	지원 대상	비율
일반재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체질 개선사업</li> <li>대학 진단체제 재구조화</li> </ul>	교육 및 연구 여건 개선 조성 지원	개별 대학 단위	60%
특수목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특성화)지원사업</li> </ul>	국가전략분야 대학 특성화	개별 대학 및 사업단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지원사업</li> </ul>	대학 연구 역량 강화	개별 대학 및 사업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학협력 사업</li> </ul>	국가·지역 산업연계 및 신기술 연구 개발	개별 대학 및 사업단	
컨소시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유성장형 대학연합체제 구축</li> <li>- 국립대 연합체제</li> <li>- 정부지원형사업대+사업대 연합체제</li> <li>- 지역혁신플랫폼(RIS) 제도 운영</li> <li>- 대학간 교육 및 연구 컨소시엄</li> </ul>	교육과 연구 시너지 효과	대학(원)간 지원	30%

### 4. 국립대학 대전환의 방향과 주요 과제

#### 마. 대학진단체제 개편

✦ 대학체제 개편과 대학평가체제와의 연동체제 구축 : '대학성장 지향의 선지원 후평가'  
 • 대학평가의 홍수시대 마감, 평가에 의한 행정권력의 영향력 감소, 평가에 대한 대학의 피로감 최소화  
 • 대학여건개선 형성기 (80-90년대) → 대학의 질 관리 유도기 (2000-10년대) → 대학 자율성장 지향기 (2020년대 이후)

**1단계**

- 대학기본역량진단 체제 (정부 주도)
- 대학의 기본적 역량 수준 점검
- 일반재정지원 여부 판단 근거

**2단계**

- 정부-대학 자율협약 진단 체제 (정부-대학 주도)
- 목적사업 평가 체제 (정부 주도)

**3단계**

- 대학 자율 성장 진단 체제 (대학 주도)
- 대학간 peer review 체제

**일반재정지원**  
**일반재정지원 특수목적지원**  
**일반재정지원 (선지원 후평가)**

## 5. 나가는 말

- ❖ “대학체제 대전환의 구도(특히 공유성장형 대학연합체제)”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 시대 정신으로 국립대가 선도적으로 도전!!!
- ❖ “대학재정의 획기적 확보”로 대학체제 대전환을 실현하는 역사적 도전!!!
- ❖ “선지원-후평가 체제”로 대학의 내적 역량 강화, 자율 성장과 사회적 책무를 실현하도록!!!
- “국립대 대전환을 위한 선결 과제.....”
  - 국립대학이 대전환의 필요성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 국립대학이 고정관념을 벗어난 새로운 사고(thinking outside the box)로 도전할 내적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 ✓ 국립대학 구성원이 개별 대학의 울타리에 갇힌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 ✓ 국립대학 구성원의 ‘사업 중심의 정책’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 ✓ 국립대학 구성원의 전공별 이기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등등
    - ✓ 국립대 학생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06

## 종합토론

좌장: 전남대학교 정성택 총장

패널: 경북대학교 홍원화 총장

전북대학교 김동원 총장

충북대학교 김수갑 총장

운영덕 국회의원(교육위원회)

교육부 신익현 고등교육정책관

동아일보 이종승 부국장



## 연구중심대학으로의 지역대학 발전을 위한 과제

경북대학교 홍원화 총장



## I. 서언

“수도권에서 멀수록 대학 위기는 가깝다.”는 우스개 소리가 있다. 예외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지방대 입장에서는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말이다. 오래전부터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위기가 올 것을 예견해 왔으나 눈앞에 닥친 현실은 생각보다 충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는 지방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거점국립대학교도 예외가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력, 산업,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고, 지방대학의 경쟁력은 돌파구를 찾기 어려워 보인다.

지방대학의 위기는 곧 지역의 위기로 이어져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는 심화되고 지역경제의 위축과 일자리 감소 등 지역 소멸의 위기로 연결 될 수 있다. 이에 대학과 지역에서는 지역소멸의 위기를 막기 위해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자구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자원의 분배가 절실한 상황이다.

국가균형발전은 교육 균형발전으로부터 시작된다. 지방대학의 우수 인력과 연구를 통한 우수 첨단 기술들이 지역산업과 접목하여 성장동력으로 작용하여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 선진국의 유명대학들은 이미 연구중심대학으로 성장하고 있고, 국내의 많은 대학들도 연구중심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이러한 대학들의 생존을 위한 노력과 이를 위해 뒷받침 되어야 할 정책들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 II. 연구중심대학으로의 지역대학 발전을 위한 과제

### 1. R&D 분권의 실현

R&D 연구기반의 집중화 문제가 심각하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 및 사업비가 특정지역에 밀집되어 있고, 산업기술인력 및 인프라 또한 수도권과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로 인해 지방 및 지방대학의 연구기능은 점차 약화되어 ‘양질의 연구인력 부족 → 우수한 연구성과 창출 불가 → 신규 연구비 확보의 어려움’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R&D 분권의 추진으로 지방대학의 연구기능을 강화하여 ‘연구성과 창출 → 지방대학 연구인력 확충 및 연구력 향상 → 관련 기업·기관 등 지역 이전 → 지역발전 견인’ 이라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지방대학 육성하고, 지역 혁신성장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정부의 대학 R&D사업 지원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교육부 외 부처 연구개발사업의 재정이 대학 R&D사업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 경우 대부분 수도권 및 대전에서 독식하고 있는 양상이다.

정부는 부처별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R&D사업을 체계화하고 중복지원과 사업 편중을 모니터링·점검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대학 R&D 사업에 대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원 비율을 제도화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구분	현재	추진방향
수도권:비수도권 R&D 수주 비율	7 : 3	4 : 6

또한, 수도권과 지방대학 간에 연구개발비 지원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대학 R&D 지원 예산 배분 방식 변경과 지역대학에 국가R&D사업 지원의 양적 확대가 요구된다.

- **(지역 및 지역대학 주도 방식으로 국가R&D사업 구조 개편)** 전체 R&D과제의 대부분이 국비이고, 지역에서 수행되는 R&D 과제 대부분이 중앙정부 주도로 투자·기획·관리 되고 있다. 지방비 또한 대부분 매칭사업비로 투자되고 자체 R&D과제를 위한 예산은 전체예산의 1%정도(887억, 2018년 기준)로 그 비중이 현저히 작기 때문에 지역과 지역대학이 기획·주도하여 지역과 대학 특성화에 적합한 R&D사업 추진이 불가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중앙주도 R&D사업 구조를 개편하여 지역혁신 방향 및 전략 수립 주체를 중앙에서 지역으로 전환하고, Top-down에서 Bottom-up 방식으로 사업 유형을 변경하여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R&D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균특회계 등 포괄보조금 사업을 발굴·확대하여 지역의 R&D 예산 결정권을 확대하도록 하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역할을 변경하여 진정한 의미의 지역 R&D 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대학연구소 활성화)** 대학연구소는 대학 내에서 연구에 관련된 체계를 구축하여 지식 기반을 확충하고 연구인력 양성의 주체로서 대학의 연구 역량 확보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대학별로 여러 가지 다양한 연구소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운영의 안정성 확보로 별다른 활동이나 실적없이 유명무실하게 난립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대학연구소는 연구전담인력(교수 및 전임연구원) 부족과 안정적 연구비 확보 불가의 등의 이유로 정부 지원 종료 후 자생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단견주의적 연구로 인해 정부사업 수주를 위해 연구소가 급조, 임시로 구축 등 자기정체성이 부족하고 연구·교육·결과물의 확산을 통한 소통이 잘 이뤄지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연구소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위해 전임연구원 등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으로 안정성과 자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연구원 처우와 연구소 환경 개선을 통해 인재 성장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우수 대학연구소 지원으로 전도유망한 연구소를 집중 육성하여 세계적인 연구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학과 연계되어 있는 주체들의 역량 결집을 통해 특성화 분야 연구 성과를 창출하도록 집중 지원하여야 한다.

## 2. 우수 연구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인재양성과 첨단 분야 연구성과 창출은 시대적 요구에 따른 대학의 필수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그에 걸맞는 교육과정과 교육·연구역량이 뛰어난 교수 인재 영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해외 유명 우수 대학들과 국내 유명 사립대학은 이미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분야의 세계적 교수를 영입하기 위해 인재선점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국내 대학들 중 특히 국립대학의 경우 재정적, 제도적 한계로 인해 소위 말하는 스타 교수를 영입하기가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박봉에 시달리며 성과와 보람을 기대하는 시대가 아닌 것을 감안할 때, 소위 말하는 스타급 교수를 스카우트하려면 그에 걸맞는 적절한 보수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보수체계의 한계) 그러나, 국립대학의 기관 특성에 따라, 국립대학의 교수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신분이다. 이에 국가에서 정하는 규정인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봉급이 책정될 수 밖에 없다. 또한, 그 이외로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다만, 일반적인 국가기관과는 달리 국립대학에는 2014년까지 사립대학과의 급여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급해오던 급여보조성 성격의 기성회 수당이 존재하였다. 기성회계가 폐지된 2015년 이후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교육·연구비(교연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그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으나, 별도의 교육과 연구, 학생지도 활동을 실시하여야 함에 따라 기존의 급여성 보조 성격과는 다르게 바뀌었다.

이 외에 보수를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교육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교원에게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경직된 체계를 가진 국립대학 교수의 보수 체계에 기반해서는 우수한 교수를 영입하고자 하더라도 추가로 보수를 책정할 수도, 지급할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반면, 상대적으로 교수 보수를 대학 정관에 근거를 두고 별도 규정 등으로 보수를 정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진 사립대학은 재원이 허락한다는 가정하에 스타 교수 영입에 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

2017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국립대 교원의 경우, 1.5억 이상 받는 교원이 전무한 반면, 사립대의 경우 교수 5곳, 부교수 및 조교수 각 1곳의 대학이 1.5억 이상의 연봉을 지급하고 있었다. 대학 전체의 전수 조사는 아닌 것을 감안하여 더 확대해서 조사한다면 사립대의 경우 1.5억 이상 지급하는 곳에 더 많은 대학이 조사될 수 있겠지만, 국립대의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보아야 한다.

〈 2017년 대학 교원 연봉 평균액 대학별 현황 〉

(단위 : 교, %)

구분		1.5억 이상	1억 이상 ~1.5억	8천 이상 ~1억	5천 이상 ~8천	5천 미만	교원 없음	계	
사립	교수	대학수	5	83	51	32	6	2	179
		비율	2.8	46.4	28.5	17.9	3.4	1.1	100.1
	부교수	대학수	1	11	54	94	19	0	179
		비율	0.6	6.1	30.2	52.5	10.6	0.0	100
	조교수	대학수	1	2	6	59	111	0	179
		비율	0.6	1.1	3.4	33.0	62.0	0.0	100.1
국립	교수	대학수	0	14	17	2	0	0	33
		비율	0.0	42.4	51.5	6.1	0.0	0.0	100
	부교수	대학수	0	0	17	16	0	0	33
		비율	0.0	0.0	51.5	48.5	0.0	0.0	100
	조교수	대학수	0	0	2	31	0	0	33
		비율	0.0	0.0	6.1	93.9	0.0	0.0	100

(출처 : 2017년 국정감사 자료)



또 다른 문제는 이와 같은 맥락으로 외국의 우수한 교수를 높은 연봉을 주고 채용해 올 수 없다는 점도 있지만, 반대로 기존 채용한 교수들 중 우수한 연구 성과를 쌓고 점점 높은 인지도와 더 나은 평판을 얻은 교수들이 좋은 조건을 제시한 국내·외의 다른 기관이나 대학으로 이탈하게 되는 걸 막을 수가 없다는 점이다. 일례로, 모 국립 대학의 경우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46명이던 이직·사직 인원이 2011년에서 2015년까지는 65명으로 증가했다는 기사도 있다.

- (기타 제도적 한계) 국립대학에서는 경직화된 보수 체계 이외에도 스타 교수를 임용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기타 제도적, 물질적 지원을 하기가 쉽지 않다.

사립대학의 경우, 스타 교수 확보를 위해 역대 연봉 외에도 석좌교수 추대, 추가 인센티브 지급, 관련 학과 및 연구소 신설, 고가의 연구 기자재 보장 등 파격적인 영입 조건을 제시할 수 있으나 국립대학의 경우 행·재정적 한계로 사립대학과의 경쟁이 어렵다.

석좌교수 임용을 예로 들면, 국립대학의 경우 교육과 연구 역량이 탁월한 석학을 석좌교수로 임용하여 교육·연구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여도 교원 정년이라는 법적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 국·공립대 강사, 겸·초빙 교원 등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을 준용하여 65세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 ①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반면, 사립대학의 경우 각 대학의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유롭게 석좌교수를 채용할 수 있으니, 국립대학 보다 교수 임용 유연성이 뛰어나다.

- (정책적 제도 개선 필요) ‘좋은 채용 조건 → 우수한 교육·연구 역량을 가진 교수인재 영입 → 우수 인재 양성 및 연구 성과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립대학이 가진 제도적 한계점을 정책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예외 조항을 신설하여 일정 규모 내에서는 대학이 전략적으로 스타 교수를 임용하여 교육·연구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할 것이다.

위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이 되면, 자연스럽게 기존의 교수들도 스타 교수로 성장하여 좋은 임용 조건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장기적으로 대학의 교육과 연구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법·제도적 지원과 함께 별도의 재정적 뒷받침도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Ⅲ. 결론

대학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연구중심대학으로 가야한다. 해외 유명대학은 이미 연구중심대학으로 나아가고 있고, 대학 평가에서도 연구력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연구중심대학으로 변화를 위해서는 대학의 자체적인 노력과 더불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편과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대학을 이끌어 갈 수 있고, 연구력 향상을 획기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우수 연구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 국립대학 같은 경우 경직된 급여 체계와 기타 제도적·재정적 한계로 인하여 스타급 우수 교원의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세계 일류대학이나 국내 유명 사립대학과의 경쟁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정책적 제도 개선을 통해 이러한 한계를 타파하여 국립대학이 연구분야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 국가거점국립대학 연합체제 추진의 진단과 과제

전북대학교 김동원 총장



## 국가거점국립대학 연합체제 추진의 진단과 과제

전북대학교 총장 김동원

## 1. 서론

대학간 협력체제 혹은 연합네트워크 구축 등에 대한 논의는 2014년 이후, 각 지역의 자치단체장이나 지역 대학의 교수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안되고, 검토되어 왔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립대학의 집중육성에 대한 의지를 갖고, 거점국립대의 연합체제 구축 등을 공약사항에 포함시켰지만, 재정 지원의 한계나 일부 사립대학의 반발 등으로 구체적인 추진을 하지 못했다. 다만, 국립대학 육성사업이나 디지털혁신공유대학 사업 등의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학사교류나 공유성장 모델을 제안한 경우에 부분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1년부터 시작된 거점국립대학 간 학부생 학사교류 인원은 한 학기당 120여명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거점국립대학간 학사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 국립대육성사업으로 정책연구를 실시하였고, 학내 홍보 강화 등을 통해 향후 더욱 많은 학생 및 교수 교류가 진척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학사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행, 재정 지원이 뒤따라야 하며, 공유대학 모델을 지향할 경우,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도 동시에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연합형 혹은 공유성장형의 대학연합체제 추진을 위한 그간의 시도를 고찰하며, 연합체제 구축에서 필요한 요건들을 전문가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본다. 아울러 2021년도 국가거점국립대학 학사교류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 결과로 얻어진 학생(학부, 대학원) 및 교원의 설문 조사 결과도 공유한다. 이를 바탕으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3단계에 걸친 국가거점국립대학 연합체제 구축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을 제안한다.

## 2. 대학연합체제 구축에 대한 진단

## (1) 대학 협력체제의 유형

- 대학간 협력체제의 구축의 목적: 대학간 높은 수준의 고등교육 품질을 달성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며, 고등교육 교육과정 제공 범위를 사회적 필요와 효과적으로 연계시키기 위함.
- 협력체제의 유형: 연계(consortium), 연합(alliance), 결합/통합(consolidation)
- 연계, 연합, 그리고 결합/통합의 차이점(표 1)

## (2) 대학연합체제 구축에 대한 기존의 연구[1]

- 반상진 외[2]: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고등교육의 모델로서 대학간 자원공유를 통한 연계·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상호 발전하는 “국가기반의 공유성장형 고등교육체계”를 제시

- 산업구조의 변화와 인구 절벽 현상에 따른 대학 존립기반의 위협에 대비
- 단편적 지식과 단순 문제풀이 중심의 고비용·저효율의 대학 입시, 높은 사립대학 의존율에 따른 높은 등록금 부담 등과 같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미래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유성장형의 연합체제 구축이 필요함을 역설
- 대학 간 협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학의 협력 수준은 매우 낮고, 개선할 점이 많음을 지적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아직 대학 구성원 및 이해 관계자들의 인식 및 참여, 각종 제도적·재정적 지원의 부족, 협력의 범위 협소 및 저해 요인으로 인한 유기적인 대학 간 협력 체제 구축은 매우 미흡한 실정

표 1. 연계, 연합, 결합/통합의 비교[1]

네트워크(network)	연계(consortium)	연합(alliance)	통합(consolid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 내 또는 기관 간 개인들의 연결망으로 관리·감독의 개입은 매우 적거나 없음</li> <li>• 일반적으로 비공식적 소통을 의미하며, 조직의 자율성에는 변화가 없음</li> </ul>	<p>개인들보다는 기관들 간 협의를 뜻하며 공식적 협약 또는 파트너십에 기초함</p>	<p>보다 광범위한 운영을 포괄하는, 확대된 형태의 협력</p>	<p>현존하는 또는 새로운 기관으로 포함됨으로써, 최소 하나의 기관이 법적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함</p>
	<p>법적권한과 특권 인적 자원, 시설, 장비 및 기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음</p>	<p>파트너들은 광범위한 역할을 공유하나, 별개의 정체성과 법적 지위를 유지하며, 협약은 취소 가능함</p>	<p>합병된 기관의 본래의 요소들은 별개의 명칭, 브랜드, 다양한 정도의 거버넌스 및 운영을 유지할 수 있음</p> <p>예) 연합(federation) 합병, 단일(unitary) 합병</p>

출처: Williams(2017: 14), figure 2.1 The Networks-collaboration-Alliances-Mergers Spectrum 요약 및 추가

- M.K.Thomas[6]: 연합(alliance)을 강조하고 있으며, 고등교육의 지형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불확실하며 역동적으로 변화하면서 기관의 전략적 연합(strategic alliances)에 대한 보다 미묘하고 창의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봄. 그리고 이러한 연합(alliances)은 장기적 경쟁력과 재정적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규모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학생들에게 새로운 학습 경로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함. 경쟁력이 있는 대학들 간의 협력체제로 얼라이언스에 참여하는 대학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짐.
  - 비교적 재정자립도가 높은 경쟁력이 있는 대학(재정적 위기에 처한 대학이 아닌 경우가 많음)
  - 공동의 필요와 전략적 목표가 유사한 대학
  - 지리적 제약 없이 외연을 확장하고자 하는 대학

- 보완적 혹은 보충적 협력을 통해 괄목할만한 비용절감, 효율성 제고, 규모 및 범위의 경제, 통합 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대학
- 행정 및 교육 부분에서 상당한 수준의 경영 모형 변화를 꾀하는 대학

### (3) 공유성장 플랫폼의 필요성

- 다양한 주체 간의 공유를 연결시킬 수 있는 플랫폼 필요
- 플랫폼은 "다양한 종류의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공통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기반 모듈, 다양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는 토대



그림 1. 전통경제에서 공유경제로의 패러다임 변화[1]

- 대학의 공유성장을 위한 대학체제 개편: 대학의 유·무형의 자원을 공유하여 대학들이 함께 상생·발전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 즉, 공유성장은 대학 간 자원 공유 및 연계·협력을 통해 대학 공동체의 공유된 가치기반 속에서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의미
- 생산연령인구 폭의 감소: 2067년에 2017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 생산연령 인구의 감소에 따른 인적, 물적 자원의 공유에 대한 플랫폼 구축 필요(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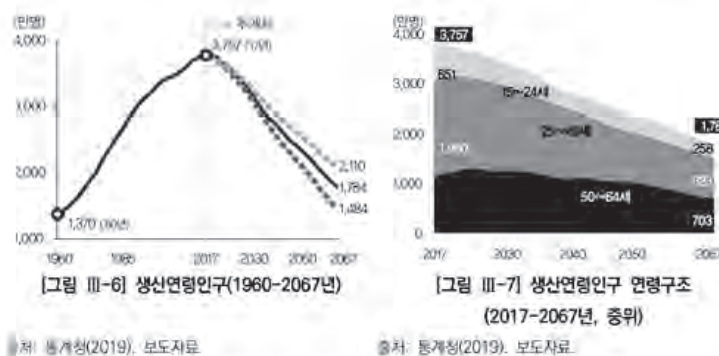


그림 2. 생산연령 인구의 변화 및 연령구조[1]

(4)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대학의 역할 증대

표 2. 대학 대내외의 환경 분석과 지역대학 육성 필요성[1]

대학체제의 대내외 환경 및 현황 분석	과제
「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에 따른 목적 모호 -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기능 모호 - 일부 학교 종류는 소수만 존재 (산업대학 2개교, 기술대학 1개교)	대학 유형의 정비 및 대학유형에 따른 기능 명확화 또는 기능 재정비
사립대학에 의존, 사립대학의 경우 학생 등록금 수입에 의존 - 일반대학의 79.2%, 전문대학의 93.4%가 사립대학 - 사립대학 재정의 등록금 의존도 50% 상회	사립대학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체제 구축 마련 시급
저출산, 고령화, 4차 산업혁명의 진전 등에 따른 대학의 역할 재정립 필요 - 2018학년도 정원대비 2021학년도 대학입학 학령인구 약 3만 명 부족, 2024학년도 약 12만 명 부족 - 4차 산업혁명의 진전 등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달	기존 생산인력의 재교육 요구,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등 대학 역할 재정립
지방의 대학입학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대학의 지역에서의 역할 강화 필요성 증대 - 2025년 대학입학 학령인구 감소율 대구 -31.63%, 광주 -31.27%, 전북-31.05%, 부산 -30.95%, 전남 -30.74%	지역의 발전에 대학의 필요성 인식 및 대학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

(5) 국립대 연합/통합 네트워크의 논의

표 3. 반상진(2017)의 대학 연합체제 구축 방법[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단계 : 정부의 행·재정 책무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국립대학법」(가칭) 및 「사립대학법」(가칭) 제정</li> <li>②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li> <li>③ 대학 재정 지원 방식의 다층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택과 집중의 경쟁 패러다임 → 협업경쟁 패러다임</li> <li>- 일반지원사업(총괄지원), 특수목적 사업(연계·협력 중심 사업별 경쟁)</li> </ul> </li> </ul> </li> <li>○ 2단계 : 대학 연합체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국립대 연합체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가지 유형(연구중심, 교육중심, 종합폴리텍(직업·평생 부문))으로 구분하여 운영</li> <li>- 지역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연합체제를 추진하여 대학원 중심 연합대학체제로 발전시키고, 교육중심 국립대, 종합폴리텍 국립대(직업·평생중심) 연합체제는 단계적으로 추진, 학력인증제 도입, '국립대학 연합운영위원회' 설치·운영</li> </ul> </li> <li>② 공영형 사립대 연합체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적 발전가능성, 지역적 필요를 고려하여 '공영형 사립대' 육성</li> <li>- 공영형 사립대는 공적 재원을 지원받되, 협약을 통해 대학지배구조의 투명성과 민주적 운영 담보, '공영형 사립대학 연합운영위원회(가칭)' 설치</li> </ul> </li> </ul> </li> <li>○ 3단계 : 국공립대-사립대 연합체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국공립대학 연합체제 완성 : 공동학위제 도입(국공립대학 연합체제 내 동일 졸업장 수여)</li> <li>② 국공립대학 연합체제와 공영형 사립대 연합체제 간의 중장기적으로 연합</li> </ul> </li> </ul>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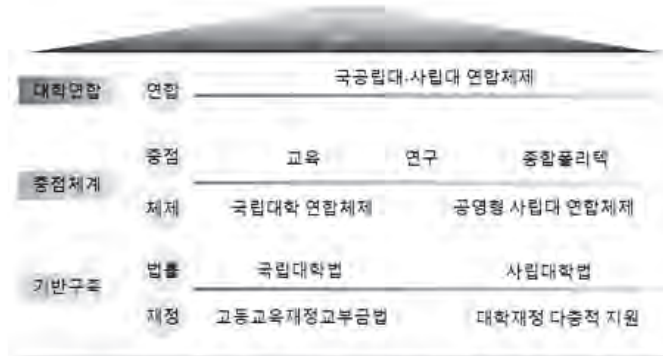


그림 3. 국공립대-사립대 연합체제 구축 모형[2]

표 4. 서울특별시교육청(2017)의 대학 공유네트워크 구축 방법[1]

- 통합네트워크 : 지역별로 산재한 국립대를 하나의 대학으로 만드는 과정. 국립대의 지역별 거점 역할을 중심으로 각 권역의 기타 국립대, 공영형 사립대, 일반 사립대를 순차적으로 포함
  - ① 1단계 : 통합국립대학 구축(통합네트워크)
    - 제1유형-10개 거점 국립대(서울대(법인화 폐지) 포함)를 포괄하는 통합국립대학을 구성, 제2유형-서울대(법인 유지)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 시도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통합국립대학을 구성
    - 통합국립대학의 기본구조
      - 공통 학위 수여, 교수·학생의 자유이동 보장
      - 각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상호 간 동등하게 인정, 정교수 승진 전에 순환근무 의무화
      - 선별 방식은 '단일한 대학명에 의한 지역별 선별'
      - 1년 동안의 공통교양과정 운영, 소속대학 변경 희망 시 소정의 절차를 통해 허용
      - 동일 학과·전공 간의 통합적 운영 및 협력체제 구축
      - 소속대학별로 별도의 의사결정체계를 갖는 동시에 통합대학 차원의 별도의 의사결정체계
    - 공영형 사립대학도 같이 추진
  - ② 2단계 : 통합국립대-지역국립대-공영형 사립대 간의 권역별 대학 연합네트워크 구축
    - 통합국립대와 공영형 사립대 간의 '대학 연합네트워크' 구축
    - 통합국립대에 속한 대학이 각 지역별 거점대학이 되도록 할(일종의 '공유의 플랫폼'), '통합'과 구별되는 '연합'네트워크
    - 국립대의 기초학문 경쟁력을 지원하고 사립대의 실용학문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국가지원정책 분화. 다양한 지역거점 국공립대학도 참여
  - ③ 3단계 : 통합형-연합형 대학 공유네트워크(일반네트워크: 대학 공유네트워크로 확대·심화)
    - 2단계 대학네트워크를 독립(형) 사립대를 포함하는 권역별 대학 연합네트워크로 확장·재구성
    - 공통교양과정 운영, 학점·학생·교수 등 교육 및 학교 운영에 있어서 통합적·상호적 교류

### (6) 대학 통합 네트워크의 추진과 진단[1]

- 대학 서열구조의 완화, 초·중등 공교육의 정상화,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보, 교육환경 변화 대비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 대학 통합네트워크의 참여대학으로 대부분 전국 및 지역의 일반대를 제시하고 있었으며, 일부 안은 대학원과 전문대학을 고려하기도 한다.

- 네트워크에서의 공유대상으로 인적 자원, 물적 자원, 교육과정, 교육·학술활동, 연구, 학사제도 등과 같은 모든 자원 및 가치를 공유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다만,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의 정도에 따라 공유 수준에 정도의 차이가 있다.

- 공유모형과 관련하여서는 대부분 단계적 추진을 제시하고 있으며, 먼저 국공립 대학을 중심으로 통합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다음으로 사립대학들과 네트워크를 추진하는 방식을 취함. 이를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재정적 토대가 구축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입시제도의 개선도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 운영체제의 경우, 대학통합네트워크의 추진주체는 중앙정부와 각 대학이 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 거버넌스에 있어서 선행안들은 각 대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인정하고, 필요한 경우, 공동 관리운영조직을 두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대학통합네트워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 기대성과로 먼저 사회 차원에서는 중등교육의 정상화, 대학서열 해소 및 학벌주의 타파, 지역균형 발전, 사회 정의의 실현을, 대학 차원에서는 대학 경쟁력 강화, 대학 기능의 정상화, 사학비리 근절, 대학 균형 발전, 고등교육의 공공성 회복 등을, 학생과 학부모 차원에서는 사교육비 감소, 정상화된 초·중등 교육 경험, 질 높은 고등교육 기회의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 쟁점은 크게 대학 통합네트워크안이 자체적으로 내포한 문제점과 대학통합네트워크안의 실현 가능성의 문제점을 제시할 수 있다.

#### ● 대학 통합 네트워크안과 관련한 문제점[2]

- 취업에 유리한 학과 개설 관행의 존재
- 대학통합네트워크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 명문대학들의 존재 및 새로운 학벌의 형성 가능성
- 대학원 단계에서의 새로운 입시 경쟁, 이로 인한 대학교육의 왜곡 현상 발생 가능성
- 입시제도 및 학생 선발제도의 개선 문제, 공영형 사립대 선정의 문제 등
- 대학통합네트워크 안의 실현 가능성의 문제: 첫째, 서울대와 주요 사립대의 참여 여부의 문제, 둘째,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의 실현가능성 등이 있음.

### 3. 해외대학의 협력체제 추진 현황

#### (1) 미국대학의 연합형(얼라이언스) 대학 추진[1]

- 컨소시엄이 주로 지리적으로 근접해있는 대학들이 연계를 도모하고 몇몇 서비

스를 공동으로 제공하는 수준의 공유모형이라면, 연합형 공유체제인 얼라이언스는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대학들이나 비교적 급진적인 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대학들에게 적합한 공유모형.

- 얼라이언스는 각 대학의 정체성과 구조를 유지하면서 주요 행정 및 학술 기능을 공동운영함으로써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하는 모형으로, 컨소시엄보다 경영 효율화라는 측면에서 효과가 높고 통폐합보다는 개별 참여대학에 덜 위협적이며 유연한 공유성장 유형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 얼라이언스는 비교적 재정자립도가 높고 경쟁력이 있는 대학들 간의 협력체제로 얼라이언스에 참여하는 대학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2].

- 비교적 재정자립도가 높고 경쟁력이 있는 대학(재정적 위기에 처한 대학이 아닌 경우가 많음)
- 공동의 필요와 전략적 목표가 있는 유사한 수준의 대학
- 지리적 제약 없이 외연을 확장하고자 하는 대학
- 보완적 혹은 보충적 협력을 통해 괄목할 만한 비용절감, 효율성, 규모 및 범위의 경제, 통합 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대학
- 행정 및 교육 부분에서 상당한 수준의 경영 모형 변화를 꾀하는 대학

#### ● 연합형 TCS 교육 시스템(TCS Education System)

- 공유목적 및 참여대학 특성: TCS교육 시스템은 2009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3개 주에 위치하고 있는 6개 비영리 독립 인증 고등교육기관, 11개의 캠퍼스를 지원하고 있다. TCS 본사는 시카고와 샌디에고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TCS 교육 시스템에 속한 전문대학 및 전문대학원은 Chicago School of Professional Psychology, Dallas Nursing Institute, Santa Barbara and Ventura Colleges of Law, Pacific Oaks College and Children's School, Saybrook University, Kansas Health Science Center이다.

- TCS 교육 시스템은 위의 특성을 모두 가진 대학들을 주요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성격이 다른 대학은 TCS 교육 시스템의 회원 대학이 되기 어렵다(Rivard, 2013). TCS 교육 시스템은 유사한 사명 및 특성을 공유하는 대학 간의 협력을 통해 얼라이언스 자체의 사명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얼라이언스 활동의 성과를 최대화한다.

- TCS 교육 시스템이 지원하는 대학은 아래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 등록정원이 1,000명에서 4,000명 정도 되는 소규모 대학 혹은 대학원
  - 한정된 지역에서 주로 학생을 모집하는 지역기반 대학 혹은 대학원
  - 등록금에 많은 부분 의지하는 등록금 기반 대학 혹은 대학원
  - 주로 25세 이상의 성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 혹은 대학원
  - 전문 분야의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전문 교육 기관

## (2) 미국대학의 결합형 대학 추진[1]

- 결합형 공유체제인 통폐합은 가장 급진적인 형태의 공유성장 모형으로 점차 많은 대학 지도자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분야이다. 현재 고등교육이 처한 재정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정부 또한 주립대학의 전공과정 혹은 대학 자체의 구조조정 및 통폐합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통폐합의 유형에는 거버넌스 주체가 다른 둘 혹은 그 이상의 대학 간의 통폐합, 다수의 대학을 하나의 주립대학체제로 재편하는 통폐합, 대학 내 여러 개의 캠퍼스 간의 통폐합 등이 있다. 구조조정이나 통폐합에 관해 이야기하면 주로 두 별개의 기관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 즉 하나의 대학이 다른 대학을 인수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 대학의 통폐합은 두 대학이 별개의 기관으로 존재하면서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교육과정을 없애는 수준에서부터 두 개의 대학이 완전히 한 개의 기관으로 거듭나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 미네소타 주는 1995년 주립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등을 주립대학체제로 재구조화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2017년 위스컨신대학은 모든 2년제 대학을 4년제 대학으로 통폐합하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커네티컷주립대학체제(Connecticut State Colleges and Universities System) 또한 주 내의 12개의 전문대학을 하나의 전문대학으로 통폐합 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외에도 켄터키(1997년), 캔자스(1965년~2008년), 앨러바마(2015년), 루이지애나(2015년), 텍사스(2015년), 조지아(2013년~2018년) 등 많은 주에서 주립대학체제의 재구조화 혹은 대학 간 통폐합을 진행해왔다[1].

## (3) 유럽대학의 협력 현황: 볼로냐 선언문(1999)[1]

- 유럽대학 협력의 목적은 다른 지역(특히 북아메리카) 대비 유럽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학생 및 교수의 국가 간 이동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 정책은 참여국의 고등교육정책을 담당하는 장관들이 주기적인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정책의제를 조율하면서 추진되었는데, 1999년 볼로냐 선언이 채택되었다.

-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의 고등교육정책 주무부처 장관들이 소르본느 선언(1998)을 했는데, 이 선언문에 유럽 고등교육 체제 통합 정책의 배경과 방향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선언문 채택의 배경은 “하나의 유럽 건설은 경제적 측면만이 아니라 지적, 문화적, 사회적, 기술적 측면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큰 틀에서 보면 대학들이 그러한 발전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다.

- 소르본느 선언문은 각 국가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서로 간의 장벽을 없애고 상호 이동성 및 긴밀한 협력을 증진하자고 했으며, 이를 위해 고등교육 학제를 이해하기 쉽게 개편하고 국가 간에 상호 학점인정을 해주며 학사과정에서 다학제적 학습, 외국어 능력 습득, 정보기술 활용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보았다

## 볼로냐 선언문의 주요 요지

- 1) 유럽 시민들의 고용가능성과 유럽 고등교육 시스템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해하기 쉽고 비교 가능한 학제 및 학위증명서(Diploma supplement) 도입
- 2) 학부와 대학원, 두 개의 주요 하위과정에 근거한 시스템 도입. 대학원 과정에 입학하려면 학부과정(3년)을 마쳐야 함. 대학원과정은 석사, 박사 과정임
- 3) 학생 이동성 촉진 수단으로 ECTS 시스템과 같은 크레딧 시스템 구축. 학점은 또한 비고등 교육(평생학습 포함)에서도 취득 가능
- 4) 이동성 촉진을 위해 학생들에게는 학습기회 및 관련 서비스 활용 기회를 제공하고, 교사, 연구자, 행정인력에게는 그들이 가진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유럽 어디에서나 연구 및 교육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 인정 및 가치부여 필요
- 5) 고등교육의 질 보장 관련하여 비교 가능한 기준과 방법론 개발을 위한 유럽 차원의 협력 증진

출처 : 유럽 고등교육 공간(European Higher Education Area). The Bologna Declaration of 1999. [http://www.ehea.info/Upload/document/ministerial\\_declarations/1999\\_Bologna\\_Declaration\\_English\\_553028.pdf](http://www.ehea.info/Upload/document/ministerial_declarations/1999_Bologna_Declaration_English_553028.pdf) (2019.08.20.)

## ● 에라스무스 플러스 프로그램

- 유럽 대학들 간의 인적자원 이동성 촉진을 위해 유럽연합이 에라스무스 플러스 프로그램을 운영.
-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은 1987년부터 시작된 유럽연합의 학생 교환 프로그램이었는데, 2014년부터 에라스무스 플러스 프로그램으로 전환.
-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은 참여대상이 학생으로 한정되었지만, 에라스무스 플러스 프로그램의 참여대상은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 직업훈련생, 교사, 자원봉사자, 운동선수 및 스포츠 코치 등 더 넓은 대상을 포함함.
- 에라스무스 문더스(Erasmus Mundus) 프로그램은 비유럽권 학생에게도 참여 기회를 줌.

## (4) 파리 대학교(Université de Paris) 통합[1]

- 파리 대학교는 파리5대학교와 파리7대학교가 통합되어 만들어진 대학이다.
- 두 대학교의 통합은 2019년 3월 20일자 국무총리령(Décret n° 2019-209 du 20 mars 2019 modifié56))에 의해 공포되었으며 2020년 1월 1일자로 시행되었다. 통합에 이룬 두 대학교는 이전에 소르본 파리 시테 대학교(Université Sorbonne Paris Cité)라는 공동체에 참여하였다.
- 통합된 대학은 “학생 61,000명, 교원 4,500명, 행정-기술직원 3,000명, 학내

연구실 142개소, 박사과정 대학원 21개소, 프랑스 대학 중에서 논문 인용률 1위, 상하이 교통대학 세계 고등교육기관 평가 순위 53위(예상), 프랑스에서 발간되는 학술논문의 10%, 대학 건물 수 35개”를 갖추고 있다.

- 국무총리령(Décret n° 2019-209 du 20 mars 2019 modifié)에 의하면 파리 대학교는 연구중심대학으로 유럽에서, 또한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데 주력한다. 이 대학의 학문분야는 보건학, 자연과학, 문학, 예술, 인문사회과학, 법학, 경제학, 경영학이다. 통합 대학교의 학교운영은 다른 대학교들과 마찬가지로 고등교육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5) 일본에서의 대학 연합[1]

##### ● 도쿄대학법인 구상

- 히토쓰바시대학, 도쿄공업대학, 도쿄의과치과대학, 도쿄외국어대학, 도쿄예술대학의 5개 대학에 의한 「제2의 도쿄대학 구상」이라고 불리는 5개 대학연합구상
- 이 통합안은 한 개의 법인을 만들어서 5개의 대학을 통합하는 것이었으나 하나의 법인을 만드는 방안은 폐기되었고, 도쿄예술대학을 제외한 4개의 대학이 「4대학 연합」을 결성하는 안이 논의되었다. 그리하여 각 대학이 공동 수업코스를 만들고, 편입학과 복수학사제도를 만드는 식으로 연계를 하고 있다.
- 4대학 연합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이수와 진학에 있어서 학생들이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더 나은 교육체제를 확립한다. 둘째, 공동연구 프로젝트나 학제적인 연구영역에서 협력을 통하여 국제적인 연구수준을 달성하고 유지한다. 셋째, 해외 대학과의 연계를 통하여 연구와 교육의 지속적인 수준 향상과 발전을 도모한다.
- 4개 대학 연합은 복합 영역 코스(특별이수 프로그램)를 개설하고 각 대학의 특색이 있는 수업과목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복합영역 코스에 등록을 하고 코스에 속한 지정과목들을 모두 이수한 후에 졸업할 하게 되면 해당 코스에 대한 수료증을 받는다.

##### ● 1법인 복수대학제도

- 국립대학들을 통합하기 위해 하나의 국립대학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산하에 여러 개의 대학들을 존치시키는 1법인복수대학제도.
- 1법인 복수대학 방식에서는 새로운 법인의 장(長)이 전체적인 경영을 담당하고 법인에 속한 여러 대학의 장들은 교육과 연구를 관할하게 된다.
- 여러 대학이 경리와 인사, 법무 등의 관리부문을 통합하고, 물품 조달과 산학연계 등의 창구를 일원화하고, 인재와 시설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경영을 효율화하는 것이다.
- 나고야대학과 기후대학이 2020년에 대학통합을 실현시키는 합의를 2018년 12월에 체결하고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4. 언론에서 본 대학간 연합(통합) 체제 추진

(1) 국립대 통합 가칭 '한국대' 설립 가능할까?[1]

- 대학 서열문제 해소 차원에서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가칭 '한국대' 설립 논의 활발, 국립대 연합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정부의 지원 요구.
-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체제에 사립대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
- 일부는 지방 국립대 위상 강화에 따른 또 다른 서열 형성과 재학생들의 반발, 사립대 재정지원 문제 등을 우려해 신중한 접근 당부(2019. 5. 11. YTN)

(2) 인천대, 국내 최초 경인지역대학 간 복수학위 학생교류 협약 체결 추진[1]

- 경인지역총장협의회 총회 및 회의를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경인지역대학 복수학위제에 14개교에서 참여하기로 결의(국민일보, 2018. 11. 26)
- 국내 대학 간 첫 복수학위제로 주목됐던 '경인지역대학 복수학위제'가 첫 걸음 도때지 못한 채 무산될 위기. 참여 대학 14곳 중 4곳이 공식적으로 불참을 선언하면서 다른 대학들의 계획도 모두 중단. 일부 학생들이 '학생 의견을 묻지 않은 일방적 추진'이라며 반대하고 대학들이 계획 철회(한국일보, 2019. 1. 21)

5. 대학간 공유성장을 위한 전문가 조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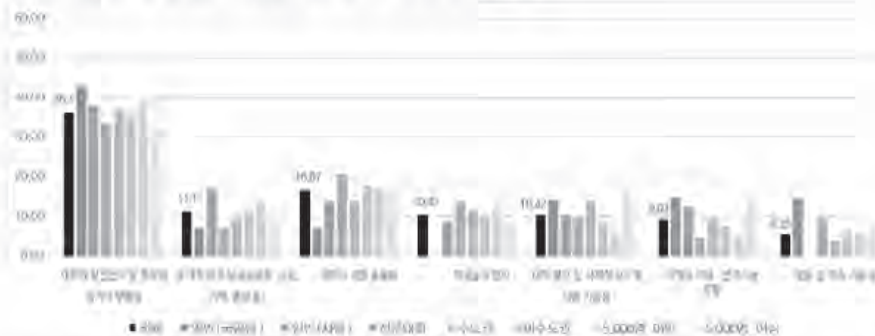


그림 4. 타 대학과 공유제도 또는 사업 추진 시 우선적 고려 요인[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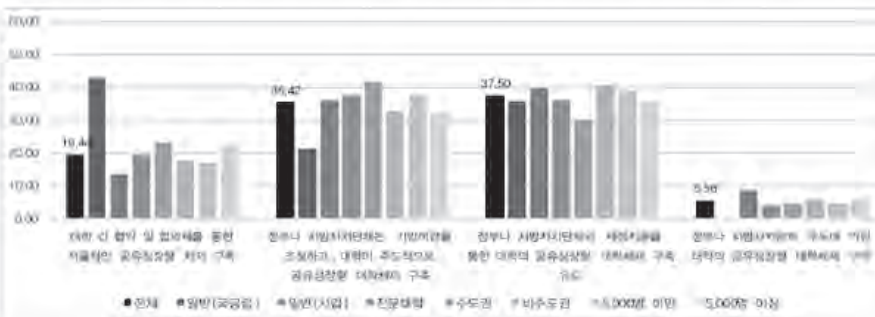


그림 5. 대학체제 개편의 추진방향[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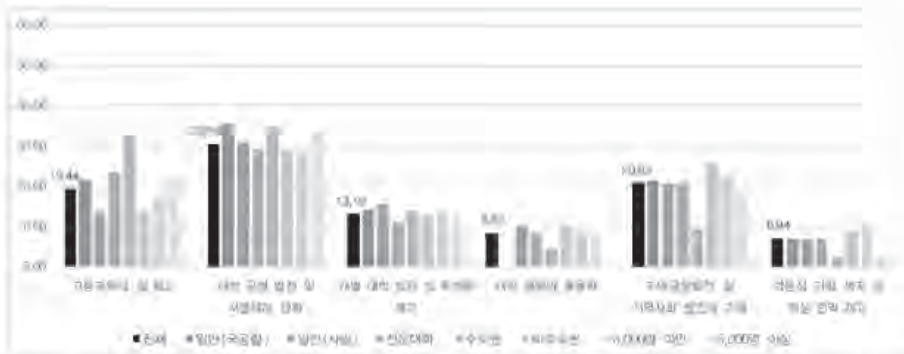


그림 6. 공유성장형 대학체제로 개편 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1]

### 6.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상과 사회공진형 대학

#### (1)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상 정립

- 급변하는 시대에 맞춰 미래가 요구하는 미래의 인재상을 새로이 정의할 필요가 있다. 미래 인재의 필요 역량은 협력(Collaboration), 의사소통 및 공감 (Communication),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 창의적 혁신(Creative innovation)과, 문화를 넘나드는 이해(Cross-cultural understanding), 컴퓨터 & ICT 독해력(Computing and ICT literacy), 진로개발과 자립(Career and learning self-reliance) 역량 등을 포함하여 4C 또는 7C로 정의되고 있다[3].

- 아울러, 미래 인재에게는 이러한 핵심적인 역량에 더해 건전한 자기인식과 훌륭한 도덕적 가치관도 요구되고 있다. 미래 인재에게 필요한 역량을 교육시킬 교육개혁이 필수적인데도 한국 교육은 지식전달 위주의 교육에 치중돼 있다.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창의적 사고력, 협업능력, 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5](그림 7).



자료: 송성진, [ET대학포럼] <17>인류난제 해결할 인재들 기르자, 2021.

그림 7. 미래 공학교육 체계[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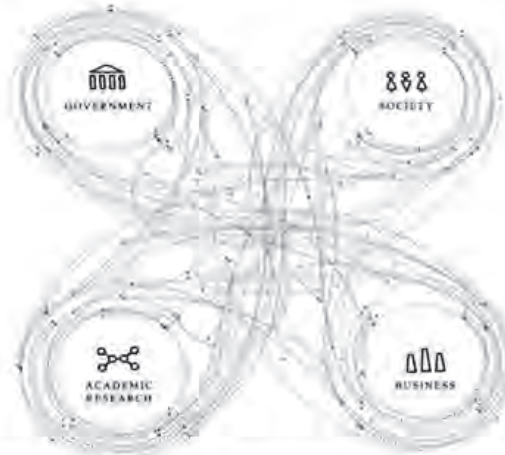
## (2) 사회 공진형(Quadruple-Helix) 대학으로의 전환

- '타깃 난제'별로 결집한 오픈 플랫폼으로서 기업, 대학, 정부, 국민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Quadruple-Helix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그림 8).

- 현재의 사회적 니즈는 대학이 'Triple-helix'를 넘어 확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이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V(Corporate Shared Value), ESG(Environmental, Social and Corporate Governance)와 같은 사회 지향적·다면적 책무로 혁신해 나가고 있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 2015년과 2016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은 "교육을 위한 새로운 비전(New Vision for Education)"이라는 화두를 던졌다. 미래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인재(talent)야말로 21세기 혁신, 경쟁력, 성장을 이끄는 핵심 요소임을 지적한 것이다. 각국의 인재 경쟁력을 지수화하여 평가하는 '세계 인재경쟁력 순위(World Talent Ranking)'에 따르면 한국은 인재 투자 및 개발 정도는 19위로 양호한 수준이나, 매력도와 인재의 기술 및 역량, 활용 가능성은 각각 41위와 34위로 하위권에 가깝다.

- 새로운 대학 모형으로의 선제적 변화는 필연적으로 마주칠 시대적 변화의 흐름이다. 그러므로 보다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대학 스스로 혁신을 모색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기존 대학을 퇴출하거나 단순히 정원을 축소하는 것과 같은 방법은 '창조적 파괴'의 본질을 벗어난 피상적 변화에 불과하다.



자료: F. Schütz, M. Lena, M. Schraudner(2019) (<https://doi.org/10.1016/j.shej.2019.04.002>)

그림 8. 4중 나선형 관점의 대학협력 체계

## 7. 국가거점국립대학 연합네트워크 추진 경과

## (1) 지역대학 연합의 성격

- 지역대학의 연합은 국가와 지역사회, 대학과 학생들에게 기여하는 바가 클 것

으로 기대된다. 먼저 국가 차원에서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지역맞춤형 공유·협력체제의 구축을 통해 지역의 문제 해결과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지역균형발전을 견인한다.

- 지역사회 측면에서는 지역대학연합(결합)을 통해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의 혁신과 산업 발전을 견인함으로써 인재의 지역 이탈과 지역 소멸을 막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 대학은 자원의 한계를 넘어 범위의 경제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고, 학생은 자신의 지역에서 질 높은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등 학문적 기회 확장, 교육 선택권의 확대, 복지 향상 등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

#### (2) 거점국립대연합(결합)체제 추진 방안

- 거점국립대학의 연합은 과기특성화대학연합(결합), 교육대학연합(결합), 연구중심대학연합(결합) 등과 같은 대학교육의 전문성 신장과 국제경쟁력 제고 등에 초점을 맞춘 기능연합(결합)형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 거점국립대연합(결합)은 국가 수준의 전략적 대학 재구조화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고등교육 생태계를 공유성장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전초 작업의 성격을 갖는다.

- 거점국립대학의 경우 과거 지역의 명문대로서 지역 인재 양성 및 지역 발전의 핵심 주체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인정받고 고등교육의 지역 격차 완화에 기여하였던 것에 비해 최근에는 거점국립대학이 쇠퇴하면서 수도권과 지역의 대학교육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 즉, 거점국립대학연합(결합)은 지역의 명문대로서 우수한 지역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전체 거점국립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집단 경쟁력향상과 서열화 완화에 기여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 실제 법에 규정되지 않은 공유 활동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학 간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어려워 문제가 발생한 공간이나 시설 등을 제공한 대학이 책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제도적 조건 하에서는 대학 간 활발한 공유·협력 활동이 일어나기 어려우므로 「고등교육법」에 대학 간 공유·협력 활동을 통해 공유성장을 촉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거나 별도 법(예: 가칭 「대학 공유성장법」)을 제정하는 것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아울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규의 정비를 통해 지역대학과 지역에서의 공유 활성화 및 중앙·지방 정부 차원의 공유·협력 활동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대학 간 공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주요 대학평가 지표를 공유의 관점에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에서도 공유를 촉진하는 지표를 포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다양한 대학들 간의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이라는 공유를 매개하는 장이 필수적이다. 기 구축된 공유 관련 플랫폼 및 시스템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대학 간 공유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공유 플랫폼의 확충과 고도화가 필요하고 아울러 대학 공유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2].

8. 국가거점국립대학 연합체제 추진 현황

(1) 국가거점대학간의 학사교류 추진 현황(2021)

- 추진배경
  - 교육역량 제고: 대학 간 학사교류 강화를 통한 국가거점국립대학(이하 'KNU10' 이라고 함)의 교육 역량 제고
    - ※ 「국가거점국립대학교 학생 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약」체결(2020.10.08.)
  - 미래인재 양성: 대학 간 상호 공유와 협력을 통하여 각 대학의 강점 분야 교과목 공동운영으로 핵심 미래인재 양성 및 교육경쟁력 강화



그림 9. 학사교류 단계별 로드맵

- 1단계 추진 : 대학 공동 학사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류 학생 모집
  - 정책연구 TF구성: 총괄위원/실무추진위원/실무지원위원, 대학별 3인
  - 정책연구 총괄위원 TF회의 : 2020.12. 8.(화) / ZOOM 화상회의
    - 정책연구 추진방향 및 학사교류 활성화 방안 등 논의
  - 정책연구 실무추진위원 회의 : 월 1회 / ZOOM 화상회의
    - 대학별 연구내용 담당 역할 내용 공유 및 정리

- 학사교류 활성화 방안 마련: 대학 공동 학사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KNU10 대학 통합공고(각 대학 홈페이지) 및 지원방안 공지
- 통합공고 실시 : 대학별 지원(신청)자격, 성적부여 방법, 수용가능인원 등 명시
- 교류학생 지원 : 생활관비·생활지원장학금(1인 최대100만원), 생활관 우선배정
- ※ 국립대학육성사업비 활용
- 2단계 추진 : KNU10 대학의 학사 교류 모델 구축 및 적용
  - 정책연구 추진: 국가거점국립대학교 학사교류강화 정책연구 추진
  - 연구기간 : 2021. 5. 17. ~ 11. 17.(전북대 주관)
  - 정책연구비 : 80,000천원(8,000천원\*10개 대학)
  - 주요내용 : 현황 및 우수사례 조사, 교류모델 및 공통기준 개발, 복수/공동학 위 정책개발, 교내·외 설명회 개최, 홍보자료 제작 등
- 3단계 추진계획 : 정책연구 추진 결과에 따른 교류모델 및 공통기준 적용
  - 학사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간 및 대상별 적용에 따른 단계별 추진(그림 9)



그림 10. 국가거점국립대학 연합체제 모형

- 기대효과
  - 지역대학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
  - 교육이동성 강화를 통한 교육 질적 수준 제고
  - 교육콘텐츠 공동 활용(공유)에 따른 교육비용 절감
  - 대학 간 교육과정 공유에 따른 교육 격차(교육의 질, 일관성) 완화

(2) 단계별 국가거점대학 연합체제 구축 방안(표 5)

- 거점대학간 연합 네트워크 구축: 가칭 '거점국립대학연합체제운영위원회' 구성
- 교육 및 연구 특성화 동시 고려한 융복합 네트워크 지향
- 복수전공/마이크로디그리 등의 대학별 특성화 인재 교육 프로그램 개발
- 공동학위를 지향하는 학점 및 학사 교류: 해당 지역 의무고용 인재할당제 대상
- 학생 교류 및 교수 교류 네트워크(교육, 연구) 각각 구축
- 국립대육성사업을 포함한 정부재정지원 사업의 우선 지원
- 서울대는 학사 교류(1단계)만 참여, 2단계 이후는 추후 검토
- RIS사업을 통한 거점대 주변의 소규모 국공립대, 사립대와의 연합체제 동시 고려(그림 10)

표 5. 단계별 국가거점국립대학 연합체제 구축방안

	1단계(2021-2022)	2단계(2023-2025)	3단계(2026-2030)
학사교류의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기 단위 학점취득 중심의 학사교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기/연간 단위 학사 교류 활성화</li> <li>• 복수전공/마이크로 디그리 등 학생역량 강화 프로그램 도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별 특성화 정책에 따른 학생/교수 이동</li> <li>• 대학별 교육과정 공유 확대</li> </ul>
학생 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별 총 교환학생 100여명 내외</li> <li>• 계절학기 집중강좌에 학생파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별 총 교환/파견 교 학생 200여명 이상 교류</li> <li>•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취업을 위한 특화 교육 시도</li> <li>• 대학원생 교류 시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학위제 활성화</li> <li>• 공동입학제 구현</li> <li>• 대학별 500여명 이상 학생 교류</li> <li>• 대학별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정착</li> </ul>
교수 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 지도교수 교류</li> <li>• 교수 교류 수요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의 및 연구 협력을 위한 교수 교환</li> <li>• 공동연구 프로그램 개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성화 단대/학부(과)별 교수 교류 활성화</li> </ul>
대학간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사교류 시스템 개발</li> <li>• 대학별 특화 영역 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수/학생 교류에 대한 포괄 협약체결</li> <li>• 다양한 공유협력 플랫폼 개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NU9 연합대학 체제 구축 협약</li> </ul>
재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별 국립대 육성사업/학생 교류를 활성화 하도록 대학별 5~10억 규모의 재정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점국립대 연합체제 구축 사업</li> <li>• 연간 50~100억 규모/전공대 학별로 모듈 개발/공동연구 그룹 및 과제 개발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점국립대 연합체제 활성화 사업</li> <li>• 연간 대학별 200억 규모/시설 개선 포함 특성화 분야별 공동연구과제 지원</li> </ul>

### 9. 국가거점국립대학 학사교류에 대한 설문 결과

(1) 설문 참여 현황: 학부생 1,000명, 대학원생 331명, 교원 224명 (2021. 거점국립대 학사교류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 보고)[4]

(2) 학부생 응답 결과 요약

- 학사 교류활동(프로그램) 참여경험과 만족도

- 전반적으로 교류(교환)학생 프로그램과 교과목 동시수강과 같은 연성교류에 대한 참여 경험율과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공동학위제나 복수학위제에 대한 경험과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됨.

- 현 단계에서 학부생들의 학사교류 참여나 만족도를 담보하는 대안은 “교류(교환)학생 프로그램”의 확대와 “국내 타 대학에서의 교과목(온/오프) 동시수강”의 질적 제고 등에 더 집중하는 것이 더 우선하는 과업으로 사료됨.

● 국내 타 대학에서의 교과목 동시 수강한 학부생의 참여경험

- 국내 타 대학에서 교과목 동시수강(타 대학의 대면/비대면/온라인 수강학점 포함)을 경험한 학생들의 수강과목과 수강동기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교양과목”의 선택 비율이 “전공과목”보다 현저히 높고, 주요 수강동기로는 “졸업 시 부족한 학점을 채우기 위해서”, “타 대학교 수업 분위기를 경험해보고 싶어서”, “우리 대학(학과)에 없는 교과목을 듣기 위해서” 등의 동기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파악되어 이를 전체적인 수강과목 교류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학사교류 활동(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 5가지 학사교류 활동에 대해 학부생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도를 파악한 결과, 전반적으로는 10점 만점에 7점 정도로 상당한 수준의 필요도를 보였지만, 거점국립대학 간 교류(교환)학생 프로그램과 교과목 동시(교차)수강 등 2가지 교류 영역에서 타 영역보다 1점 이상 높은 필요성을 보인 것으로 분석되어 현재 학생들의 욕구는 연성교류(학생교류와 교과목 동시수강)에 더 방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학사교류 환경에 대한 인식

- 학사교류 환경에 대한 학부생들의 인식(대학본부, 교수, 행정직원들이 학부생들의 학사교류 활동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는 5점 기준으로 3.12의 “보통”수준에 해당하는 지원환경이라고 응답하였는데, 상대적으로 교원(교수)들의 지원(3.00점)이 대학본부(3.24점)나 행정직원(3.13점)의 지원 노력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특화 기능별 대학 구성에 대한 의견

- 학생이 재학 중인 개별 대학이 특정 학문분야의 전문성을 차별적으로 강화하는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묻은 결과, 동의하는 입장(동의+적극 동의)이 절반 정도로 나타났고, 입장을 유보하는 중간층과 부동의(부동의 + 적극 부동의)의 입장을 가진 학생들도 비슷한 비율로 파악됨.

- ‘재학 중인 대학이 특정 학문분야의 전문성을 차별적으로 강화하는 것’에 동의한 응답자들만(N=500) 답한 내용에서 해당 대학이 어떤 전문성 분야로 특화해야 하는지를 묻은 결과(복수응답 가능)에서는, “공학계열(67.8%)”, “자연계열(41.0%)”, “의약계열(39.0%)”에 대한 전문화 선호도가 인문/사회/교육/예체능 계열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

## (3) 대학원생 응답 결과 요약

## ● 학사 교류활동(프로그램) 참여경험과 만족도

- 참여경험 관련하여, 조사에 참여한 대학원생들은 국내외 공동학위제나 복수학위제에 참여한 학생은 2%대 이하로 나타났고, 교과목 교차수강은 3%대, 국내외 교류(교환)학생 비율은 각각 4%와 5%대로 나타나, 연성교류 프로그램의 참여 경험이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됨. 참여한 프로그램의 만족도와 관련해서는 '국외 타 대학(대학원)과의 복수학위제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4.25점), 다음으로 국내외 교류(교환)학생 프로그램(4.21점과 4.22점), '국내 타 대학(대학원)에서의 교과목 동시수강'(4.18점) 순이었음.

- 향후 사업기획 시, 국내 교류(교환)학생 프로그램이나 국내 타 대학(대학원)에서의 교과목 동시수강 영역은 적극적으로 학생의 만족도를 담보할 수 있을 것임.

## ● 국내 타 대학에서의 교과목 동시 수강한 대학원생의 참여경험

- 국내 타 대학(대학원)에서 교과목 동시수강(타 대학의 대면/비대면/온라인 수강 학점 포함)을 경험한 소수의 대학원생의 수강동기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우리 대학(학과)에 없는 교과목을 듣기 위해서', '집에서 가까운 대학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타 대학교 수업 분위기를 경험해보고 싶어서', '졸업 시 부족한 학점을 채우기 위해서' 등의 동기가 비교적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파악되어 이를 전체적인 수강과목 교류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학사교류 활동(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 5가지 학사교류 활동에 대해 대학원생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도를 파악한 결과, 전반적으로는 10점 만점에 7점 정도로 상당한 수준의 필요도를 보였고, 거점국립대학 간 교류(교환)학생 프로그램과 교과목 동시(교차)수강 등 2가지 교류 영역에서 타 영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필요성을 보인 것으로 분석되어 현재 학생들의 욕구는 연성교류(학생교류와 교과목 동시수강)에 더 선호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향후 대학원생들의 학사교류 기획 시 이를 반영하는 노력이 일관되게 필요함을 알려줌.

## ● 학사교류 환경에 대한 인식

- 학사교류 환경에 대한 대학원생들의 인식(대학본부, 교수, 행정직원들이 대학원생들의 학사교류 활동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는 5점 기준으로 2.89점 "보통 이하"에 해당하는 지원환경이라고 응답함.

- 이는 전체 조사 영역 중 가장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주는 영역이기도 하고, 동일 영역의 학부생 응답수준(3.12점)보다 의미있게 낮은 수준이어서 개선 노력이 전반적으로 필요하다 판단됨.

- 특화 기능별 대학 구성에 대한 의견
  - '재학 중인 대학이 특정 학문분야의 전문성을 차별적으로 강화하는 것'에 동의한 응답자들만(N=172) 답한 내용에서 해당 대학이 어떤 전문성 분야로 특화해야 하는지를 묻은 결과(복수응답 가능)에서는, "공학계열(54.07%)", "인문계열(36.63%)", "사회계열(36.05%)"에 대한 전문화 선호도가 교육/자연/의약/예체능 계열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
- (4) 교원 응답 결과 요약
  - 학사 교류활동(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인식)
    - 전반적으로 교원들은 국·내외 교류(교환)교수/ 학생 프로그램과 같은 연성교류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공동학위제나 복수학위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이해나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어, 향후 대학 간 가시적인 공동학위제나 복수학위제를 기획할 때 이를 극복하는 대안이 필요해 보임.
  - 학사 교류활동(프로그램) 참여경험
    - 교원들의 학사교류활동 참여 수준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국내 타 대학과의 교류(교환)교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원은 52명(23.2%)이며, 국외 타 대학과의 교류(교환)교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원은 5명(2.2%)인 것으로 나타남.
  - 학사교류 활동(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 전반적으로는 10점 만점에 7점 정도로 상당한 수준의 교수 교류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거점국립대학간 교류(교환)학생 프로그램, 거점국립대학간 교류(교환)교수 프로그램, 거점국립대학간 교과목 동시(교차)수강 등 3가지 교류 영역에서는 타 영역보다 높은 필요성을 보인 것으로 분석되어 현재 교원들의 욕구는 학생교류, 교수교류, 교과목 교류 등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학사교류(교수교류) 활동(프로그램) 참여 의향
    - 학사교류(교수교류) 활동(프로그램)에 대한 교원들의 참여 의향 수준을 묻은 결과, 가장 높은 수준으로 원하는 활동은 '국립대학 간 교과목 교차수강이 허용될 경우, 나의 강좌(강의)를 개방 공유하는 것'이었고, 교환교수 프로그램의 경우 다른 영역에 비해 가장 낮은 참여의향을 보임. 해당 결과는 현 상황에서 시도 가능한 가장 현실적인 교류 중 하나가 대학간 교과목을 공유 개방하는 것임을 시사함.
  - 학사교류 환경에 대한 인식
    - 학사교류 환경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대학본부, 교수, 행정직원들이 교수와 학생들의 학사교류 활동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는 5점 기준으로 3.03의 "보통"수준에 해당하는 지원환경이라고 응답하였는



데, 대학본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가장 긍정적인 인식(3.21점)을 보여 준 반면, 교수들의 지원노력(2.93점)이나 행정직원들의 지원(2.95점)에 대해서는 보통이하로 평가함.

● 특화 기능별 대학 구성에 대한 의견

- 교원이 재직 중인 개별 대학이 특정 학문분야의 전문성을 차별적으로 강화하는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묻은 결과, 동의하는 입장(동의+적극 동의)이 유보층과 부동의 입장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56% vs. 44%). 이는 학부생이나 대학원생들의 의견과는 다소 차이나는 결과임.

## 10. 맺음말

먼저 대학간 협력체계의 유형과 더불어 그간에 추진된 국내외 대학 연합/통합 네트워크 추진 현황을 살펴보았다. 자치단체 및 학회, 개별 연구자 등을 통해 다양한 연합체제 구축 방안이 제안되었고, 지난 정부에서부터 대선 공약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현재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구조조정 및 공영형 사립대 운영 등과 이해관계가 맞물려 국립대 연합체제 구현이 지연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역소멸의 위기가 계속 다가오면서, 지역을 살리고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단기간에 강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 사회의 많은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고 본다.

서울대를 포함하여 10개 국가거점국립대학의 학사 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연구가 지난 5월부터 7개월간 수행되었다. 학부생/대학원생/교수 대상의 설문조사가 행해졌고, 세 그룹 모두, 거점국립대학간의 학점교류 및 교환학생, 교환교수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지원 등을 기반으로 단계적인 연합체제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이동성 강화를 통한 교육 수준의 질적 제고와 교육 콘텐츠 및 자원의 공동 활용, 그리고 교육과정 공유에 따른 교육 격차의 완화 등이 기대효과로 나타난다.

거점 국립대 간의 학부/대학원 학사 교류가 강화되면, 2023년 이후에는 각 대학별 200여명 이상의 교환학생이, 2025년 이후에는 대학별 약 500여명 이상이 복수전공, 마이크로학위 등을 위해 학사교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이들 학생을 가르치고 지도하기 위한 교수 교류와 특성화 분야별 공동연구를 위한 교수 교류도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지역인재 채용의무 할당제가 30%+20% 방식으로 확대되면, 혁신도시 공공기관 취업을 위한 특화 공동교육 프로그램 참여자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 특히, 각 대학별 중점 교육/연구 분야가 정해지는 향후 5년 이후에는 국가균형발전과 공유성장을 지향하는 KNU9 연합대학체제의 구축이 활발히 전개될 것이다. 정부의 단계별 재정지원 강화와 더불어 법과 제도의 정비도 국가거점국립대학 연합체제 구축의 필수 요건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1. 조옥경외, 대학의 공유성장을 위한 대학체제 개편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19.
2. 반상진. 국립대 연합체제 구축방안 논의: 국립대 공동선발과 공동학위제 실현을 위한 방안 탐색. 교육비평, 39, 58-76, 2017.
3. 새로운 100년 산업혁명, 추월의 시대로 가자, 공학한림원, 2021.
4. 거점국립대학 학사교류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 중간보고서, 2021.
5. 허준, 대학의 과거와 미래, 연세대학교 출판문화원, 2021.
6. Thomas, M. K. (2015). *Between Collaboration and Merger: Expanding Alliance Strategies in Higher Education*. New York, NY: TIAA Institute.

“수도권 쏠림 현상이 부르는 국가적위기”와  
“국립대학 대전환의 방향과 중점 과제”

충북대학교 김수갑 총장



## “수도권 쏠림 현상이 부르는 국가적 위기”와 “국립대학 대전환의 방향과 중점 과제”에 관한 토론

김수갑(충북대학교 총장)

- 일-삶-놀이-배움이 융복합된 공간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비수도권도 서울의 도심처럼 다양한 기능이 융복합된 혁신 거점을 조성해야 하며, 혁신 거점의 강화를 위한 대학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마강래 교수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함
  - ➔ 이를 통해 학술적, 정책적 관점에서 더 나아가 ‘도시권 관점의 공간전략’ 차원에서 국립대학의 역할에 대해 유의미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음
- 국립대학의 사회적 역할과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주요 국립대와 사립대 간 교육연구 및 재정 현황 비교를 통해 국립대학 대전환의 방향과 주요 과제에 관한 해안을 제공해주신 반상진 교수님께 경의를 표함
  - ➔ ‘대학체제 대전환의 틀’로서 제시하신 ① 공유성장형 대학연합체제, ② 국가책임 대학재정 지원체제, ③ 대학진단체제의 개선의 과제와 그 구체적 실행방안은 고등교육 전문가로서 오랜 기간의 전문적 분석과 통찰의 결과이며, 실효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음
- 발표자의 발표 내용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아울러 토론자로서 몇 가지 보론 또는 대안적 관점을 제시하고자 함

- 첫째, 마강래 교수님이 주장하신 ‘도시권 관점의 공간전략’의 측면에서 볼 때 대학, 특히 국립대학은 교통인프라 정책, 산업정책, 인재양성 정책 등의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혁신거점 공간으로서 플랫폼 역할을 효과적으로 담당해야 함
  - ➔ 무엇보다도 국립대학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앵커기관(Anchor Institution)으로서 지역사회 혁신거점의 플랫폼 역할을 담당하기에 적합함
  - ➔ 혁신거점의 플랫폼으로서 대학에 축적된 인적·물적·지적 자원을 지역정부, 산업체, 교육기관, 민간기관 등과 연계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지역 및 도시 발전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함(홍성효 외, 2020)
  - ➔ 혁신거점의 플랫폼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대학, 지역정부, 산업체, 교육기관, 민간기관으로 구성되는 안정적인 거버넌스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함
- 둘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대학 간의 실질적 협업의 활성화 및 상생을 유도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함
  -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수립)①항, ③항<sup>1)</sup>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부장관과 함께 지역의 실정과 여건에 적합한 기본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함(김민희 외, 2019)

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①항 교육부장관은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③항 교육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3조제1항에 따른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에 대한 대학과 지역의 협업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전반을 위한 대학과 지역 간 협업을 보장하고 의무화하는 규정은 미흡함(조성은 외, 2021). 지방대학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규정하되, 지방대학은 지역발전과 지역역량 증진,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 산업 진흥 등을 위하여 독자적 또는 협력적인 방법으로 지역사회 단체 및 연구기관, 공공기관들에게 인력교류, 교육연수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각 지역기관은 이에 응해야 함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김민희 외, 2019)
- 셋째, 국립대학의 공공성, 자율성, 및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고, 국립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의 충분성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해 국립대학법 제정이 필요함
- 반상진 교수님은 국가책임 대학재정지원체제 개편을 위한 전략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고등교육법, 대학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 등의 제정과 고등교육세 신설을 제안함
- 재정 확보의 충분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국립대학법안에서 ① 국립대학 지원예산의 범위를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등 국립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아울러 국립대학의 교육연구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원금까지 포함시키고, ② 국립대학 지원예산의 규모는 국립대학의 학생 1인당 국고지원금이 국립대학 법인의 학생 1인당 국고지원금과 격차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확보할 것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전국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2021)
- 끝으로, 대학진단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대학기본역량진단과 대학기관인증평가는 현재 중복 활용되고 있는 평가지표가 다

수 존재하므로 양 평가의 연계 및 활용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단기적으로는,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중 대학기관평가인증과 중복되는 지표의 결과를 3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시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김병주 외, 2021)

※ 대학기본역량진단 지표 중 연계 활용 가능 지표(김병주 외, 2021)

- 「1.1 특성화계획 또는 중장기 계획 등 발전계획」
- 「2.2. 교육비 환원율」, 「2.1. 전임교원 확보율」
- 「3.2. 구성원 참여·소통」, 「3.1. 법인 책무성」
- 「4.2. 수업 관리 및 학생 평가」
- 「5.1. 학생 학습역량 지원」, 「5.3. 취·창업 지원」, 「5.5. 진로·심리 상담」
- 「6.1. 학생 충원율」, 「6.2. 졸업생 취업률」

→ 중장기적으로는, 대학기관평가인증의 4개 판정 유형을 재정지원과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대학기관평가인증의 판정 유형과 재정지원 간 연계(김병주 외, 2021)

- 인증대학/조건부인증 대학: 경상비(혁신지원사업) 지원, 재정지원사업 신청, 국가장학금 지원
- 인증유예 대학: 인증유예기간 중 경상비(혁신지원사업) 지원 제한, 정부 재정적 신청 자격은 부여하되 인증유예기간 중 사업비 제한(보완평가 후 인증되는 시점부터 경상비, 사업비 지원)
- 불인증/미인증 대학: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 제한



## 참고문헌

- 김민희, 장덕호, 이정미, 배영주(2019). 지역대학과 지역사회 연계 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김병주, 김민희, 이정미, 서화정, 문명현, 박원혁(2021).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평가 발전방향 수립.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조성은, 이상립, 강지원, 이길재, 김지선, 홍지오, 황안나, 박태양(2021).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혁신역량 제고방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차정인, 박홍원, 이문순, 김윤기, 임재홍, 이정미, 허종렬, 송기춘, 문병효(2021). 국립대학법 제정을 위한 연구. 전국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 홍성효, 권형돈, 김미혜, 이정미, 정세은(2020). 지역혁신을 위한 미래지향적 고등교육체제 구축 방안 연구. 국가교육회의.

2021 The 2nd  
Higher Education  
Policy Forum

# 2021 제2차 고등교육 정책포럼

- 국가균형발전과 고등교육의 방향 -

| 일 시 | 2021. **11. 22.** (월) 15:00~18:20

| 장 소 |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 컨벤션홀  
(Bloom A / LL층)

| 진행방법 | 온·오프라인 실시간 생중계